

연구보고서 2014-02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2014. 10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진

유 일 한	연구 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정 대 운	연구 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크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복지 및 안전부문 재정 지출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지속적으로 SOC 예산을 줄어나간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SOC 사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앞으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SOC 시설은 국민들의 복지나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투자 대상입니다. 이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투자 정책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SOC 시설은 양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어서 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SOC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생활밀착형 SOC'입니다.

생활밀착형 SOC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대형 SOC와는 달리 소규모의 지역기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생활 편의 증진과 함께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지역밀착형 기업인 전문건설업체가 해야 할 주된 역할이 바로 이와 같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가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및 전문건설업체들의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2014년 10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 장 노 재 화

요 약

- 본 연구는 국민들의 복지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안으로서 생활밀착형 SOC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생활밀착형 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인프라”로 정의됨.
 - 생활밀착형 SOC는 소규모의 SOC, 또는 지역 기반의 SOC 시설 및 사업이라는 점에서 각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과 밀접히 연관됨.
- 생활밀착형 SOC 관련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SOC 투자는 위축되고 있으나, SOC 스톡(stock)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노후화 진행도 심한 상황임.
 - SOC 투자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해 국민소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 투자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
 - 그간 경제기반 인프라와 국토보전 인프라에 공공투자가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활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생활인프라의 부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고, 고비용의 생활구조를 야기하며, 도심기능이 쇠퇴하는 등 많은 문제가 유발되어 옴.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SOC 투자 패러다임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개선, 안전 확보,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제고 및 도시간·지역간 격차 해소 등으로 전환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지역밀착형 기업인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개선방향 및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우선,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6개 부문(주거, 교통, 복지, 여가, 안전, 기타)으로 분류하여 모두 27개의 중점 사업으로 선별함(Short-list).
 - 상기와 같이 선별한 중점 사업 및 생활밀착형 SOC 관련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국 35개 전문건설업체의 응답을 분석함.

- 본 연구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생활밀착형 SOC의 시설 수준은 ‘비교적 취약한 수준’이며, 현재 대비 최소 20% 이상 ~ 최대 100%(2배) 이상의 투자 확대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 법령에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기업과 함께 생활밀착형 SOC 사업 수요를 발굴해야 함.
 - 지자체(시·군·구)를 통한 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연구결과로 도출된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분류	세부 사업
1순위 (안전)	재난대비시설	• 노후 시설물 재난대비 개보수 사업
	하천시설	• 하천·제방·수로 정비 사업
2순위 (복지·주거)	주택	• 노후 주택 등 주거시설 정비 사업
	상하수도	• 노후 상하수도 개보수 사업
	학교교육시설	• 노후 학교 개보수 사업
	아동·청소년시설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
3순위 (교통·여가)	주차장	• 주차장 확충·정비 사업
	도로	• 도로(혼잡도로, 지방도로 등) 확충·정비 사업
기타	추가 제안 사업 (※ 검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지역 안전·구명시설 설치 사업 • 장기적 가뭄 대비시설 조성 사업 • 지역 단위 우수·분뇨 처리시설 확충 사업 • 농어촌 영농 편의시설 확충 사업 • 퇴직 중년 복지시설 조성 사업 • 흡연부스 등 보행이용시설 개선 사업 • 폐가 및 무허가시설물 철거·정비 사업 등

- 상기와 같은 투자 개선방향과 함께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전문공사로의 분리발주 및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활용 등을 통한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정부의 지원 하에 지자체 및 전국 16개 전문건설협회 시·도회 조직을 통한 지역 현안 사업의 발굴·제안 및 사업 시행시 지역 업체의 참여 우대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등 불합리한 수행 여건 개선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2장 생활밀착형 SOC 개념 및 정의	5
제3장 생활밀착형 SOC 관련 주요 이슈	9
1. SOC 투자의 현황	9
2. SOC 투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7
3.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중요성	25
4. 전문건설업 관련 이슈	35
제4장 생활밀착형 SOC 사업 분류	39
1.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종류 및 유형	39
2. 중점 사업의 선별	44
제5장 전문건설업체의 인식 및 요구	49
1. 조사 개요	49
2. 조사 및 분석 결과	52
제6장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67
1. 생활밀착형 SOC 투자 방향	67
2.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72
제7장 결론	75
[참고문헌]	81
부 록: 설문조사서	83

- 표 목 차 -

〈표-1〉 SOC 관련 용어의 개념 및 정의	6
〈표-2〉 생활밀착형 SOC 관련 용어의 개념 및 정의	8
〈표-3〉 최근 10년간의 부문별 SOC 투자 추이	10
〈표-4〉 ‘공약가계부’ 연차별 소요 및 재원 대책	11
〈표-5〉 우리나라 SOC 스톡의 국제 비교	14
〈표-6〉 우리나라 인프라의 고령화율	14
〈표-7〉 2014년 국토교통부 SOC 예산 현황	15
〈표-8〉 분야별 정부 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6
〈표-9〉 산업별 산업연관효과 비교	28
〈표-10〉 시·군별 주요 생활서비스 격차	33
〈표-11〉 세계 주요 도시별 공원시설 공급 현황	34
〈표-12〉 생활인프라 시설 유형별 문제점	35
〈표-13〉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종류 및 유형(Long-list)	42
〈표-14〉 생활밀착형 SOC 중점 사업의 선별(Short-list)	48
〈표-15〉 응답 업체의 위치(지역)	50
〈표-16〉 응답 업체의 시공 영역	50
〈표-17〉 응답 업체의 평균적인 연간 매출액	51
〈표-18〉 생활밀착형 SOC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의 참여 경험(지역별 분류) ..	53
〈표-19〉 생활밀착형 SOC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의 참여 경험(규모별 분류) ..	53
〈표-20〉 우리나라 생활밀착형 SOC 시설의 전반적인 수준(영역별 분류) ·	54
〈표-21〉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필요성(영역별 분류)	54

<표-22>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의미(효과)(지역별 분류) ...	55
<표-23>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의미(효과)(영역별 분류) ...	55
<표-24>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수준(규모별 분류) ...	56
<표-25>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의 바람직한 형태(지역별 분류) ...	57
<표-26>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의 바람직한 형태(규모별 분류) ...	57
<표-27> 가장 우선시되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부문(지역별 분류) ..	58
<표-28> 가장 우선시되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부문(규모별 분류) ..	58
<표-29> 가장 우선시 되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사업(지역별 분류) ..	60
<표-30> 가장 우선시 되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사업(영역별 분류) ..	61
<표-31> 가장 우선시 되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사업(규모별 분류) ..	62
<표-32> 전문건설업이 제안하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	63
<표-33>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조치(지역별 분류) ·	65
<표-34>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조치(규모별 분류) ·	65
<표-35> 전문건설업체가 선정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 우선순위	71

- 그림 목차 -

[그림-1] SOC 투자 및 사업 추진의 문제점	18
[그림-2] SOC 사업 관련 주요 이슈 및 문제점	19
[그림-3] 중앙·지방 비용분담 SOC 사업의 문제점	20
[그림-4] GDP 대비 SOC 투자비중 추이 및 전망	21
[그림-5] SOC 투자 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27
[그림-6]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개념과 전개 과정	29
[그림-7]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분류체계 설정	41
[그림-8] 응답 업체의 주력(대표) 업종	51
[그림-9]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조치	64

-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국가경쟁력 및 도시경쟁력, 복지와 삶의 질, 지역경제발전, 국민의 안전 확보 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음.
 - 최근 10년 SOC 투자 동향을 보면 SOC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확대 및 4대강 사업 등이 집중되었던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확대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에 따라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자체 및 공기업을 통한 SOC 투자 역시 기대하기 어렵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SOC 투자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앞으로의 우리나라 SOC 투자 전망은 매우 위축되고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 SOC 스톡(stock)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 우리나라는 SOC 스톡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외에 1960년대 중후반부터 집중적으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이미 30년 이상 된 노후 인프라가 증가되었다는 문제점이 상존함.
 - 즉, 지난 30여 년간 축적한 대규모 SOC 스톡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부의 재정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태임.
- 반면, 주요 외국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확대, 그리고 노후 인프라 개선과 재해방지 등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SOC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우리나라 SOC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및 복지와 밀접히 연관된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임.
 - 생활밀착형 SOC는 양적, 질적으로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면서 도시간·지역간의 격차도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해 도시민들은 생활편익과 안전 등의 차별 및 위협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생활밀착형 SOC 투자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특히, 전문건설업계 입장에서 보자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사업에 해당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지역밀착형 기업이라는 점이 중요한 이슈임.
-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절차에 의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생활밀착형 SOC의 개념 및 정의 도출
 - 생활밀착형 SOC 관련 주요 이슈 진단
 - SOC 투자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향 분석,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중요성 고찰, 전문건설업 관련 이슈 진단
 -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분류
 -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종류·유형 고찰 및 중점 사업의 선별
 - 설문조사를 통한 전문건설업계의 인식 및 요구 분석
 - 생활밀착형 SOC 사업 관련 실태 및 문제점, 투자 확대의 필요성과 투자 확대 방향, 정책 개선방안 등
 -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사항 도출
 -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개선방향 및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도출

-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들의 복지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SOC 투자 대안으로서 생활밀착형 SOC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은 일반적으로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정의되고 있으며¹⁾, ‘기반시설’ 또는 ‘인프라’(infrastructure)라는 용어로도 주로 불리고 있음.
- 민범식 외(2012) 연구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기능에 근거하여 국토보전인프라, 생산기반인프라, 생활인프라로 구분한 바 있음.²⁾
 - 국토보전인프라에는 치수시설, 치산시설, 해안시설 등이 포함
 - 생산기반인프라에는 공업용수도, 공업용지조성, 유통시설, 전력·가스 시설, 농업기반시설, 임도, 어항, 공항, 항만, 터미널 등이 포함
 - 생활인프라에는 주택, 택지조성, 상하수도, 도시공원, 주차장, 청소시설, 학교, 사회교육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훈련시설,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시설, 관공서시설 등이 포함
 - 도로, 철도, 전기시설, 통신시설은 생산기반인프라와 생활인프라의 공동 영역으로 분류
- 조판기 외(2013) 연구는 사회간접자본(인프라)의 유형을 다시 산업기반, 산업생활공동기반, 생활기반으로 분류한 바 있고, 이와 관련된 유사한 용어의 개념을 표-1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관련 법률 및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공공시설, 간선시설,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공공공간, 기초생활인프라 등의 용어들이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됨.

1) 네이버 지식백과

2) 민범식 외(2012), 건전한 도시생활기반 정비와 환경보전 방안, 국토연구원

〈표-1〉 SOC 관련 용어의 개념 및 정의

구분	관련 법률	개념 및 정의
기반시설	국토계획법, 도축법, 도시개발법	경제활동 및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로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한 53개 시설
사회기반 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거나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등으로 43종의 시설
공공시설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계획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의 용(用)에 공(供)하는 시설로서 주로 공공부분이 주체가 되어 설치(법률에 따라 시설 종류는 차이가 있음)
간선시설	주택법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도시계획 시설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정비기반 시설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기반시설
공공공간	건축기본법	가로, 공원, 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기초생활 인프라	도시재생법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

자료: 조판기 외(2013),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 국토연구원

- 또한 최근에는 ‘신 SOC’, ‘좋은 SOC’ 등의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 및 해석이 나타나는 등 SOC의 역할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³⁾
 - 신 SOC란 “국가의 경제성장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한 기존 SOC의 역할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복지와 행복을 실현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며, 이러한 신 SOC는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반

3) 국토(2013.3), 특집 「신 SOC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영하기 위하여 IT, 에너지, 환경, 안전 등과의 융·복합이 강조되고, 경제적 효율성과 더불어 인본주의 등 인문학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정의됨.

- 좋은 SOC란 “기능성, 경제효율성, 공공성, 친환경성, 심미성, 그리고 맥락성을 갖춘 SOC 시설”로 정의됨.
- 상기와 같이 분류되는 기반시설 가운데 생활인프라 및 기초생활인프라 등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생활밀착형 SOC’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생활밀착형 SOC는 이 외에도 생활형 SOC, 국민체감형 SOC, 복지형 SOC,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
 - 관련 법률 및 계획, 연구자료, 보도자료 등에서 제시한 생활밀착형 SOC 관련 용어의 개념 및 정의는 표-2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표-2와 같은 다양한 생활밀착형 SOC 관련 정의들 중에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가장 많은 기관 또는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밀착형 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인프라”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요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음.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
 - 소규모의 SOC 시설 또는 사업
 - 지역 기반의 SOC 시설 또는 사업
 - 국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 또는 사업
 -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사업
 -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

〈표-2〉 생활밀착형 SOC 관련 용어의 개념 및 정의

구분	출처(근거)	개념 및 정의
국민생활에 밀접한 소규모시설	2004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자대상사업 및 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교통시설 외 국민실생활에 밀접한 분야 소규모시설
생활밀착형 SOC 시설	신용보증기금(2006)	SOC 시설 중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지역 및 생활밀착형 SOC 시설(주로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
생활밀착형 보행·자전거	제1차 지속가능국가 교통물류기본계획 (2011-2020)	단거리 운행 승용차의 보행 전환 및 자전거 수송 부담률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교통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생활인프라	국토연구원(2012)	기반시설 중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기능을 하는 시설
생활형 SOC	제4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13-2017)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SOC(혼잡도가 높은 도시내 교통인프라, 생활형 지방교통 SOC,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홍수예방시설 등)
생활인프라	국토교통부(2013) 국토연구원(2013)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인프라
국민체감형 SOC	2014년 국토교통부 투자방향 및 발주계획	생활공원 조성사업, 도시생활교통 혼잡개선 사업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
복지형 SOC	아주경제(2014.1.5)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미래 복지 수요 등에 대비한 SOC
생활밀착형 인프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고 일상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
생활밀착형 SOC	중앙일보(2014.6.30)	국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는 SOC

주: 관련 용어 및 자료가 발표 또는 표현된 시기(년도) 순서에 의해 나열함.

1. SOC 투자의 현황

- SOC 투자는 국가경쟁력 및 도시경쟁력, 복지와 삶의 질, 지역경제발전, 국민의 안전 확보 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음. 그동안 우리나라 SOC 투자정책의 기조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⁴⁾
 - 1950년대는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사업 위주로 투자됨. 즉, 파괴된 SOC 시설과 농공생산부문 시설복구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짐.
 - 1960년대는 자립경제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에 집중이 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산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공업단지조성, 물과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댐과 발전소 건설, 물동량과 지역간 여객의 이동을 위한 기간도로 및 항만건설 등에 집중 투자함.
 -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육성 및 공업벨트 조성을 위한 수송시설 확충 및 현대화에 주력함. 산업생산지원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업단지, 공업도시, 고속도로 등 SOC 확충이 활발했음.
 - 1980년대는 지난 20년간 고도성장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SOC 투자도 상당부분 축소됨.
 - 1990년대는 세계화 및 지방화와 대비하여 SOC 투자를 확대함. 교통혼잡과 물류비 상승으로 SOC 부족 문제가 부각되어 1993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정 등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관리에 주력함.
 - 2000년대는 사회 양극화 심화와 노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SOC 분야의 예산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4) 류재영 외(2012), 전환기의 SOC 투자정책방향: 도로정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특히, 2010년 이후 최근에는 경제의 저성장 시대로 진입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강조 및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SOC 건설의 양적 확장 정책에서 연계와 운영효율 강화, 사람 중심의 보행·자전거 등과 같은 생활의 질적 개선으로 전환됨.
- 최근 10년의 SOC 투자 동향을 보면 SOC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와 4대강 사업 등이 집중되었던 2009년을 기점으로 확대된 바 있음.⁵⁾
 - 중앙정부 예산은 2009년을 기점으로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지자체의 SOC 예산도 약 9조원대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폭 감소 추세임.
 - 공기업의 SOC 투자는 2010년 9.6조원에서 2013년에는 6.5조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민간투자 역시 2009년 3.9조원에서 2013년에는 2.8조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표-3〉 최근 10년간의 부문별 SOC 투자 추이

(단위: 조원, 경상가격 기준)

연도	중앙정부 예산	지자체 예산	공기업	민간투자	합계
2004	17.4	6.6	2.5	1.7	28.2
2005	18.3	7.0	3.4	2.9	31.6
2006	18.4	7.0	3.9	2.9	32.2
2007	18.4	7.0	3.9	3.1	32.4
2008	20.5	7.8	4.1	3.8	36.2
2009	25.5	9.7	5.6	3.9	44.7
2010	25.1	9.5	9.6	2.7	46.9
2011	24.4	9.3	9.6	2.2	45.5
2012	23.1	8.8	6.1	2.7	40.7
2013	24.3	9.1	6.5	2.8	42.7

자료: 박용석(2013),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5) 박용석(2013),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표-3과 같이 2009년을 기점으로 최근 SOC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GDP에서 SOC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2%에서 2012년 3.19%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2004년의 3.41%보다도 낮은 수준임. 더욱이, 정부는 복지 확대 등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 마련(공약가계부)을 위해 SOC 예산을 향후 4년간(2017년까지) 11.6조원 삭감키로 하여 중앙정부 SOC 투자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표-4 참조).

〈표-4〉 ‘공약가계부’ 연차별 소요 및 재원 대책

(단위: 조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재원 대책	7.4	17.4	30.5	36.8	42.6	134.8
① 세입 확충	2.9	7.9	11.8	13.7	14.4	50.7
② 세출 절감	4.5	9.5	18.7	23.1	28.1	84.1
○ 의무지출 조정	-	0.5	0.7	0.8	0.9	3.0
○ 재량지출 조정	-	5.8	9.6	9.5	9.9	34.8
- SOC 분야	-	1.7	2.7	3.5	3.7	11.6
- 산업 분야	-	0.9	1.3	1.0	1.1	4.3
- 농림 분야	-	0.8	1.3	1.3	1.8	5.2
- 복지 분야 (주택)	-	2.2 (2.1)	4.0 (2.9)	3.4 (2.5)	2.9 (2.0)	12.5 (9.5)
- 기타 분야	-	0.2	0.3	0.3	0.4	1.2
○ 이차보전 전환	-	0.7	1.4	1.7	1.7	5.5
○ 국정과제 재투자	4.5	2.5	7.0	11.2	15.6	40.8

자료: 기획재정부·관계부처합동(2013.5),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기업을 통한 SOC 투자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SOC 투자도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박용석, 2013).

- 지자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이 2002년 54.8%에서 2013년 51.1%로 낮아짐에 따라 지역 개발을 위한 SOC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공기업의 부채가 최근 크게 증가하는 등 전체 28개 공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의 재무지표 악화로 SOC 투자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폐지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침체가 계속되어 민간투자를 통한 SOC 사업 활성화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상기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SOC 투자 전망은 매우 위축되고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의 SOC 스톡(stock)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박용석, 2007).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OC 스톡 현황은 다음과 같은 수준이라고 요약할 수 있음.⁶⁾
- 교통혼잡 비용이 2002년 22.1조원에서 2009년 27.7조원으로 증가되는 등 도시간 도로 및 도시내 도로의 교통혼잡 계속 심화
 - 대도시권 광역화와 여가통행량 증가 등 도로수요 증가로 2009년 지역간 도로의 교통혼잡 비용은 10조원 규모
 - 7대 도시의 도시내 도로 교통혼잡 비용은 17.6조원으로 대도시 내부 혼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매우 심각
 - 국도의 포장률을 비교적 높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이용빈도가 높은 도시내 도로의 포장률은 낮음
 - 일반국도의 포장률은 97.6% 수준이나, 시도 및 군도는 각각 68.5%, 61.4%에 불과
 - 지역간 격차도 커서 서울의 도로 포장률은 100%이지만, 경남은 경우 68.7%에 불과
 - 물류비 및 교통혼잡 비용의 증가로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
 - GDP 대비 교통혼잡 비용은 2.8%(2008년)로 미국 0.6%, 일본 2.3%

6) 국토교통부(2013),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실현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

- GDP 대비 국가 물류비는 15.6%(2007년)로 미국 10.1%, 일본 8.7%에 비해 높은 수준
-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인프라 수준은 최근 점차 하락하는 추세⁷⁾
 - 전체 인프라의 수준 순위는 2009년 20위에서 2012년에는 22위, 2014년에는 23위를 차지
 - 도로 인프라는 2009년 14위에서 2012년에는 17위, 2014년은 18위를 차지했고, 철도는 2009년 8위에서 2012년과 2014년에는 10위를 차지
 - 이 밖에도 항만운송, 항공운송, 전력공급 모두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
-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도로 1km당 자동차 대수는 가장 많고, 철도 부문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인프라 수준은 중하위권 수준에 불과 (표-5 참조)
- 우리나라는 SOC 스톡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외에 1960년대 중후반부터 집중적으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이미 30년 이상 된 노후 인프라가 증가되었다는 문제점이 상존함(박용석, 2013).
 - 현대경제연구원(2013)은 산업단지를 제외한 7가지(교량,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시설, 상하수도)의 주요 인프라 14,544개 시설 가운데 30년 이상 된 시설이 1,352개소에 달해 고령화율(30년 이상)을 평균 9.3%로 제시한 바 있음.⁸⁾
 - 고령화율이 높은 SOC 시설은 지금도 계속 고령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에 따른 재난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7) 기획재정부, WEF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및 분석, 각 년도

8) 김동렬(2013.4),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과제,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표-5〉 우리나라 SOC 스톡의 국제 비교

구분	비교 항목	2005년		2006~2009년		비고
		실적	한국 순위	실적	한국 순위	
도로	도로밀도	103km/100km ²	15/27	105km/100km ²	16/27('08)	하락
	총도로길이	102,293km	16/27	104,236km	16/27('08)	
	인구천명당 자동차수	319대	18/22	346대	26/30('08)	
	도로승객운송	91,665백만명·km	10/16	97,854백만명·km	9/15('06)	
	도로포장률	76.8%	11/19	78.5%	9/19('08)	상승
	도로1km당 자동차수	151대	2/24	161대	1/30	상승
철도	철도연장	3,392km	22/32	3,381km	23/32('08)	하락
	철도 화물운송실적	10,108백만톤·km	17/30	9,273백만톤·km	13/26('09)	하락
	철도 여객수송실적	31,004백만명·km	6/32	31,298백만명·km	6/31('09)	
항만	항만인프라 질적수준	5.5/7	14/34	5.1/7	21/34('09)	하락
	컨테이너 처리실적	15,113천TEU	3/22	16,053천TEU	3/22('09)	
공항	항공 화물운송실적	7,432백만톤·km	4/32	15,162백만톤·km	2/34('09)	급증
	항공 여객운송실적	33,888천명	11/31	34,168천명	10/34('09)	
	항공기 운항실적	221,424회	13/32	256,160회	13/34('09)	

자료: World Bank (국회 예산정책처(2011), 국제 비교를 통한 교통 SOC 투자적정성 분석, 재인용)

〈표-6〉 우리나라 인프라의 고령화율

(단위: %, (개소))

운송				에너지·공익				인프라 전체
교량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시설	상하수도	산업단지	
5.7 (465)	5.0 (106)	13.1 (39)	12.7 (109)	55.9 (292)	20.1 (232)	7.7 (109)	54.2 (-)	9.3 (1,352)

자료: 김동열(2013.4),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과제,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주: 고령화율 = (30년경과 시설의 개소 / 전체 시설의 개소) × 100, '산업단지'는 면적 기준이며, '댐'에는 저수지를 포함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SOC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표-7과 같이 2014년 예산을 수립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음.

〈표-7〉 2014년 국토교통부 SOC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증감	변화율(%)
도로	89,344	83,912	△5,432	△3.4
철도(도시철도)	69,141	68,032	△1,109	△1.6
항공·공항	830	1,008	178	21.4
물류 등 기타	12,159	12,683	524	4.3
수자원	27,694	23,830	△3,864	△14.0
지역 및 도시	8,034	7,978	△56	△0.7
산업단지	9,742	8,990	△752	△7.7
주택	3,260	2,682	△578	△17.7
해양환경	1	1	-	-
합계	220,205	209,116	△11,089	△5.0

자료: 국토교통부(2014.2), 2014년 국토교통부 투자방향 및 발주계획

- 건설투자 감소가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SOC 예산의 급격한 축소는 경기 악영향 및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 우려
- SOC 예산 감축에 따른 도로·철도 사업의 장기화로 현장관리비 등 간접비용 추가 부담문제 발생
- 지역경제는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역경제의 약 20~25% 수준) SOC 예산 축소시 지역경기 위축 우려
- 기존 SOC 시설의 고령화로 적정한 유지관리 예산투입 없이는 국민생활 안전을 크게 훼손
- 지속적인 SOC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로밀도, 철도밀도 등 우리나라의 SOC 스톡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

- 국토교통부는 상기와 같은 SOC의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표-7과 같이 SOC 예산을 축소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과 같은 8가지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1) 적정 수준의 SOC 투자

-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은 SOC 예산의 급격한 감소(11.6조원 삭감)를 전망하나, 부문별 투자소요 전망과 과거 투자추세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 예산을 확보

2) SOC 투자 패러다임 전환

- 교통 SOC(도로·철도)는 기존시설 운영 효율화에 중점
- 고령화, 인구증가율 둔화 추세를 감안하여 지역·도시 및 주택에 대한 투자를 확대

3) 공기업 부담 축소, 부채해소 추진

- 공기업의 자구노력 강구와 함께 고속도로 PSO(공익서비스) 및 수자원공사 지원 방안도 검토

4) 국민체감형 신규 SOC 발굴

- 생활공원 조성사업, 도시생활교통 혼잡 개선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

5) 지역간 SOC → 도시부 SOC 투자

- 중추도시권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 강화
- 급증하는 도시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로·철도의 도시부 투자 확대

6) 시설개량·유지보수 예산 확대

- ‘사고대응형’에서 ‘예방중심형’으로 유지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위험도로 개선, 철도시설 개량 등에 집중 투자

7) SOC와 첨단 ICT 기술의 융합

- ICT 기술을 활용한 국토인프라 건설·운영·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공간정보·ITS(지능형 교통시스템)·항공·레저를 창조경제 산업으로 육성

8) 해외건설, 국제협력 강화

- 해외건설시장 개척 등 해외진출 관련 예산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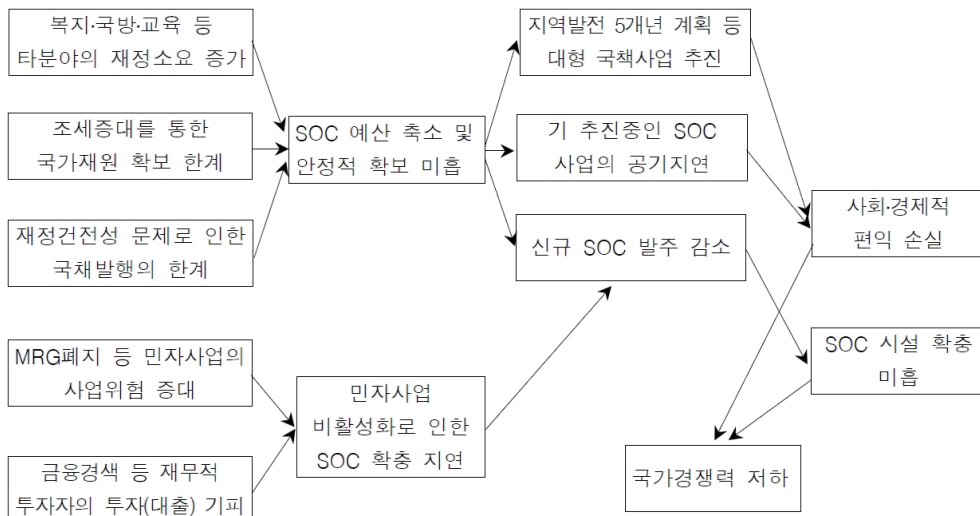
2. SOC 투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우리나라 SOC 투자의 가장 핵심적 문제점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설이 충분치 못한 상태이고, 또한 지난 30여 년 간 축적한 대규모 SOC 스톡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부의 재정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임.⁹⁾
- 최근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을 통해 SOC 투자를 감축하게 된 주요 배경 및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¹⁰⁾
 -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복지지출·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축소하고 토목건설을 추가로 감축할 것을 적시하였고, 이후 공약가계부에서 복지에산 확대 등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4년간 11.6조원 삭감하기로 발표함.
 - 또한, 정부는 SOC 투자의 또 다른 주체인 공기업의 경우 ‘부채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공기업을 통한 SOC 투자 감축이 예상됨.
 - SOC 예산의 삭감 규모는 철도가 가장 크고, 도로와 수자원이 그 다음인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같은 SOC 투자 감축에 대해 정부는 ‘SOC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조정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중단’할 계획임을 표명함.

9)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2), 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 과제

10) 이승우 외(2013), 중소 건설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유형 모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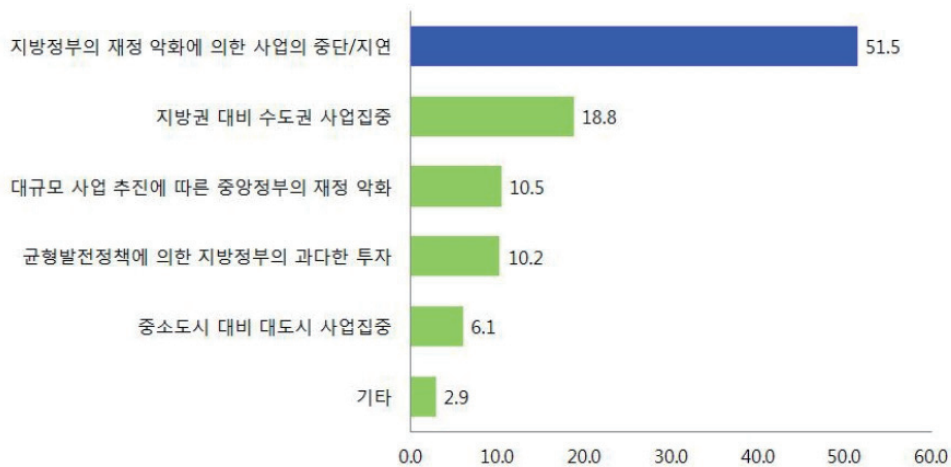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교통시설의 경우 국토면적 대비 도로연장이 OECD 회원국 중 고속도로가 5위, 국도는 7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SOC 투자 축소의 배경이 되고 있음.
- 기존의 연구(박용석 외, 2009)는 교통시설을 포함한 정부 SOC 예산의 급격한 축소가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등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기 추진 중인 SOC 사업의 공기지연 등을 초래하는 등 사회·경제적 편익 손실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그림-1 참조).
-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SOC 스톡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고 물류 및 교통혼잡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SOC 시설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자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대책을 주장하고 있음.
- SOC 확충은 막대한 투자비가 장기간에 걸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임.



[그림-1] SOC 투자 및 사업 추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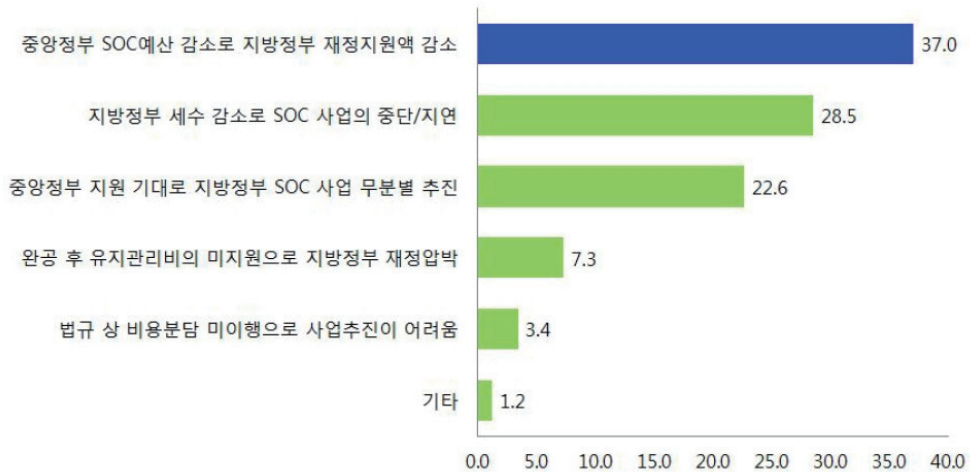
자료: 박용석 외(2009), 2010년도 예산(안) 및 SOC 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 SOC 사업의 이슈 및 문제점에 관한 전문가 조사를 수행했던 한 연구는 우리나라 SOC 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에 의한 사업의 중단/지연, 지방권 대비 수도권 사업집중 등을 꼽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비용분담 SOC 사업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SOC 예산 감소로 지방정부 재정지원액 감소, 지방정부 세수 감소로 SOC 사업의 중단/지연 등을 지적한 바 있음(그림-2, 3 참조).¹¹⁾



[그림-2] SOC 사업 관련 주요 이슈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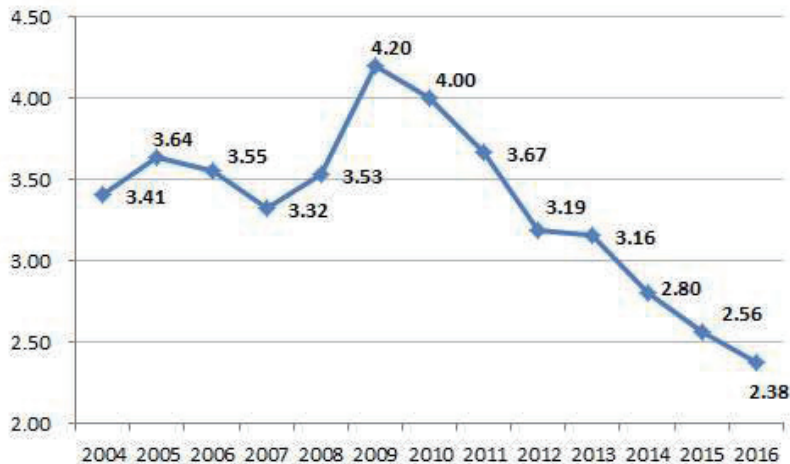
11) 조남건 외(2012),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그림-3] 중앙·지방 비용분담 SOC 사업의 문제점

- 국토교통부는 2014년 SOC 투자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상기와 같은 관련 문제점을 포함해 SOC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제약 요인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 저성장 기조 장기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완만한 개선세가 예측되나 여전히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SOC 투자 위축
 -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와 저출산 추세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복지 분야 지출소요 증가로 SOC 투자 위축
 - 공공기관 부채증가
 -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한 반면, 공공기관 역할 강화 요구로 인해 SOC에 대한 투자 여력 감소
 - 신규사업 억제 기조
 - 신규사업 축소(2009년 100건 → 2014년 82건)로 향후 SOC 투자규모의 감소가 예상(특히 도로 부문의 신규사업 급격히 감소)

- 이와 같이 앞으로도 SOC 투자가 계속해서 위축될 경우 GDP 대비 적정 SOC 투자규모의 추정치인 2.52~3.06%를 하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¹²⁾
 -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 근거한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규모 범위는 2.52~3.08%로 추정·분석되고 있음.
 - 2013년의 불변가격 기준 SOC 투자규모는 36.1조원이며 이는 GDP 대비 3.16%에 해당되지만, 공약가계부 등에 따라 2016년의 SOC 투자규모는 30.2조원(불변가격 기준)으로 급감할 것이 전망됨에 따라 2016년에는 GDP 대비 2.38%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16년 이후 우리나라의 SOC 투자규모는 적정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그림-4] GDP 대비 SOC 투자비중 추이 및 전망¹³⁾

자료: 박용석(2013),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2)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 공개토론회(2013.6)에서 발표된 ‘SOC 분야 중기 투자 방향’ 내용을 토대로 박용석(2013)의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임.
 13) ‘SOC 투자 = 중앙정부 예산 + 지자체 예산 + 공기업 투자 + 민간 투자(BTO, BTL)’이며, 2012년 까지는 투자규모 추이를 나타낸 것이고, 2013~2016년은 전망치를 나타낸 것임.

- 또한, 상기의 연구(박용석, 2013)는 우리나라가 SOC 투자를 축소하는데 비해 주요 외국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확대, 그리고 노후 인프라 개선과 재해방지 등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SOC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된 경제 회생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연관효과에 따른 각 분야 생산 증대를 추진
 - 2009년 「미국의 복구 및 재투자법(ARRA)」을 제정하여 신규 SOC 사업에 98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교통시설 건설에 중점을 둠.
 - 2009년 이후 현재까지 SOC 및 건설산업 부문에 약 1,500억달러 이상 투자하였으며, SOC 투자 확대로 인해 인프라 개선의 효과가 있었고, 부동산 경기 및 미국 경제의 회복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및 각종 인프라 개선에 관한 양적완화 정책 등에 따라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이 3.3% 수준을 기록함.
- 영국의 SOC 투자는 GDP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정책을 통해 영국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
 - 영국은 국가인프라계획(NIP)에 의거 SOC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교통(도로, 철도, 터널, 항만 등), 에너지 부문의 사업에 집중 투자함.
 - 2015년까지 2,000억파운드 투자를 계획하였으며, 그 중 50% 가량은 민간투자로 추진함.
- 프랑스는 철도사업 위주로 총고정자본형성과 GDP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지출의 일정한 수준 유지를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함.
 -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 중이며, 민간투자사업으로 관련 자원 조달을 추진하여 2006~2012년까지 약 250억유로를 조달한 바 있고, 이후 2020년까지 약 320억유로를 조달할 계획임.
-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를 추진하여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10

년간 도로, 항만 등 토목사업에 200조원을 투자하는 ‘국토강인화계획’을 추진하였고,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는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함.

- 또한, 일본은 도로와 제방 등 노후화 된 인프라의 점검·보수와 건축물 내진화의 추진 예산을 늘림.
 - 밀집 주거지의 방화 대책, 생활공간의 안전 확보 방안으로 좁은 도로 확장 및 보도 신설 등을 추진함.
 - 부족한 재정 보완 및 SOC 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투자사업을 적극 활용기로 함.
 - 이 밖에 제3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2012~2016년)을 수립하여 SOC 시설에 대한 총 9개 과제 18개 시책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으로 SOC 투자를 확대·추진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 등의 SOC에 대한 투자는 각종 미래 전망 등에 따라 예상되는 핵심과제의 해결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짐.¹⁴⁾
- 미국의 공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14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도시 인프라 개선, 맑은 물의 공급, 탄소 저장시설의 개발 등 3개 SOC 관련 과제가 포함됨.
 - 영국의 과학부(Government Office of Science)는 미래 사회의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인공 환경(built environment)의 지속가능한 관리, 지능형 인프라 건설, 홍수 등 재해방지의 3개 SOC 관련 과제가 포함됨.
- 상기의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SOC 투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최근의 국내 SOC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SOC 투자의 확장 요인이 존재하

14) 권오현 외(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 지원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므로 지속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¹⁵⁾

- 쇠퇴하는 도시경쟁력

- 국제사회는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간’ 경쟁으로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으나 그간 수도권외의 신도시개발로 지방 구도심은 지속적으로 쇠퇴
-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28개(57%)가 도시쇠퇴 진행 지역으로 나타남.

- 시설물 고령화

- 2013년 기준으로 준공 이후 30년 이상이 지난 고령 시설물은 전체의 11% 수준이며, 향후 10년간 2배 이상(24.5%)으로 급증할 전망
- 낡은 기반시설은 파손·붕괴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경제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음.

- 기술간 융합

- 기존 산업과 인프라에 ICT 기술 등을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실천적 패러다임
- 기술간 융합은 민간영역 뿐 아니라 고령화, 안보, 재난, 환경문제 등 국가사회현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SOC 투자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됨.

- 개도국 건설시장 확대

- 중국·인도·브라질 등 개도국의 성장으로 세계 건설시장은 2009~2013년간 연평균 5.6%의 성장세를 기록함.
-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물산업, 도시개발, 그린에너지, 교통시설 등의 SOC 분야는 보다 확대될 전망

- 상기의 조사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SOC 투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15) 국토교통부(2014.2), 2014년 국토교통부 투자방향 및 발주계획

- 국가경쟁력과 도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SOC 투자가 지속 또는 확대될 필요가 있음.
- SOC 투자가 지속되지 못할 경우 기존 인프라 효율성 저하 및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중단 문제 등으로 사회·경제적 편익 손실이 우려됨.
- 특히, 지방정부 및 지역 기반의 SOC에 대한 향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부족한 자원 문제는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신규 SOC의 양적 투자뿐 아니라 기존(노후) 인프라에 대한 개선과 재해방지 등을 위한 질적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짐.
-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외국의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SOC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중점과제에서도 SOC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다양한 분야의 SOC 투자가 필요하지만 특히 최근에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3.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중요성

- 생활밀착형 SOC는 앞서 제2장 정의에서도 제시되었듯이 SOC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중요성은 우선 SOC 투자의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SOC 투자는 경제 성장(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업률 축소 효과가 뛰어나며, 자본적 투자에 해당하는 총고정자본형성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국회 예산정책처, 2009).
- 15개 분야별 정부 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SOC 투자에 해당하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 지출이

경제 성장(실질 GDP)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 지출이 15개 분야 중 실업률 축소 효과가 가장 높았음.
- 자본적 투자에 해당하는 총고정자본형성 효과에 있어서도 ‘국토 및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 지출이 15개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음.

〈표-8〉 분야별 정부 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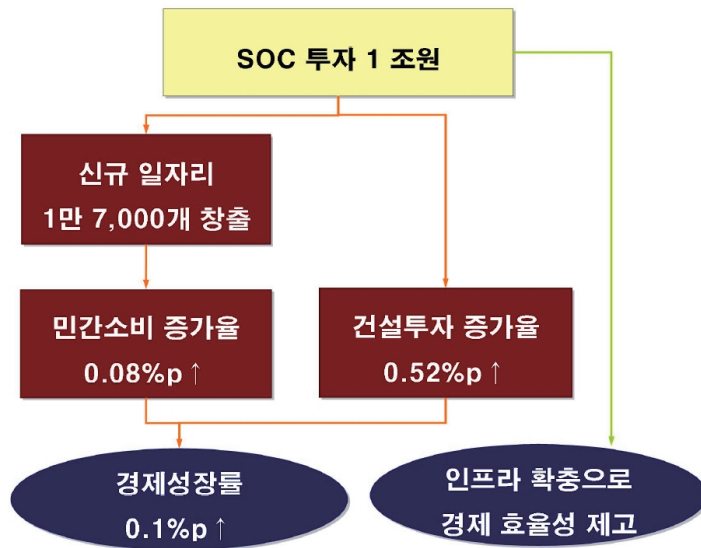
(단위: %P)

지출 구분	실질 GDP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	민간소비	총고정자본 형성
1. 일반 공공행정	0.0223	-0.00145	0.00301	0.04500	0.00464
2. 공공질서 및 안전	0.0163	-0.00107	0.00187	0.00968	0.01446
3. 통일·외교	0.0190	-0.00124	0.00244	0.03035	0.00473
4. 국방	0.0229	-0.00152	0.00274	0.01415	0.04423
5. 교육	0.0229	-0.00149	0.00312	0.04787	0.00455
6. 문화 및 관광	0.0230	-0.00151	0.00300	0.03601	0.01937
7. 환경보호	0.0232	-0.00151	0.00312	0.04482	0.00970
8. 사회복지	0.0229	-0.00149	0.00312	0.04843	0.00374
9. 보건	0.0226	-0.00147	0.00307	0.04648	0.00481
10. 농림해양수산	0.0248	-0.00162	0.00326	0.03946	0.02456
11. 산업·중소기업	0.0275	-0.00181	0.00359	0.03871	0.04017
12. 수송 및 교통	0.0302	-0.00200	0.00387	0.03410	0.05982
13. 통신	0.0173	-0.00114	0.00207	0.01639	0.01202
14. 국토 및 지역개발	0.0304	-0.00202	0.00387	0.03082	0.06494
15. 과학기술	0.0228	-0.00148	0.00310	0.04744	0.00449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2009), 재정 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분야별 자원 배분을 중심으로)

-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1조원의 SOC 투자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분석·제시하고 있음.¹⁶⁾

- 1조원의 SOC 투자는 연간 약 17,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 1조원의 SOC 투자는 건설투자 증가율을 약 0.52%p 상승시키는 효과
- 1조원의 SOC 투자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08%p 높이는 효과
- 1조원의 SOC 투자는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진작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약 0.1%p 높이는 효과
- 또한, SOC 투자는 장기적으로도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경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



[그림-5] SOC 투자 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08),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

- 상기와 같은 SOC 투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외에도 SOC가 중점이 되어 있는 건설산업은 타 산업 및 전 산업 평균에 비해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의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6) 현대경제연구원(2008),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

〈표-9〉 산업별 산업연관효과 비교

구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쉐 산업 평균
생산유발효과('11)	2.13/1단위	2.10	1.75	1.97
취업유발효과('11)	13.5명/10억원	8.7명	15.8명	12.3명
고용유발효과('11)	12.0명/10억원	6.3명	10.8명	7.9명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년 기준)

- 이와 같이 SOC 투자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해 국민소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음.¹⁷⁾¹⁸⁾
 -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는 소비적 복지(consumptive welfare)¹⁹⁾와는 대조를 이루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함.
 - 즉,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층은 노동을 통해 사회복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기술 혁신 및 인프라 등 일자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일을 통해서 안정적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welfare to work’의 의미를 가짐.
 - 생산적 복지는 취약 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의 확대보다는 노동(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복지 정책의 수혜보다는 노동을 통해 자립·자활 하는데 초점이 맞춰짐.
 -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 of 1996)」을 제정하면서 생산적 복지가 구체화됨.
 - 영국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생산적 복지 개념을 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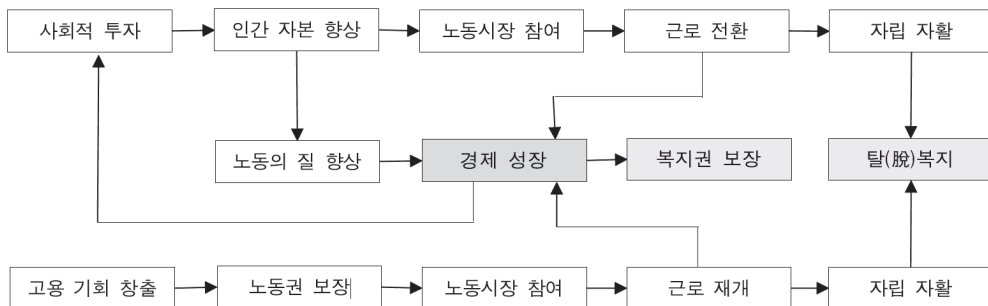
17)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2), 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 과제

18) 박용석(2013),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 ‘소비적 복지’는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직접 기여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를 국가의 핵심으로 부상시켰으며, 이때 생산적 복지 개념이 활용되기 시작함.

-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그림-6과 같이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탈(脫)복지를 추구하는 것임. 또한 생산적 복지는 근로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 성장에서 얻어진 사회적 부를 새로운 노동에 투자함으로써 사회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따라서 생산적 복지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취약 계층의 참여가 용이하며, 국가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함.



[그림-6]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개념과 전개 과정

자료: 김기원(2000.6), Welfare to Work 정책과 생산적 복지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SOC 투자를 지속·확대함에 있어 요즘과 같이 국민의 ‘삶의 질’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생산기반 인프라보다 국민의 생활에 밀착된 생활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 최근 들어 생활밀착형 SOC 투자가 중요시되는 도시정책 환경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²⁰⁾

20) 국토(2013.8), 특집 「삶의 질 제고와 생활인프라 확충」, 국토연구원

-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 통계청의 향후 인구감소 예측에 따라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 계획했던 거대 지향의 인프라보다는 생활과 관련된 인프라의 수요 증가
 -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도시내 쇠퇴한 지역의 생활인프라에 대한 욕구 증가로 복지·문화·휴양시설 등에 대한 공급이 매우 중요
- 경제의 저성장 지속가능성
 - 경제의 저성장은 원도심의 쇠퇴 및 인구감소를 초래해 현재도 부족한 생활인프라가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 초래
 - 기성시가지에 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인구를 다시 끌어 모으는 선순환구조의 구축 필요
- 도시재생의 필요성 증가
 - 도시재생사업은 창조적 도시경제기반 구축, 사회·물리적 안전망 구축,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복원 등이 주된 목표
 -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결국 시민생활과 밀착되는 공원·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의 공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
- 삶의 질에 대한 욕구의 증가
 - 과거에 비해 고차적인 욕구 증가로 사회적 욕구, 자기존중 욕구,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에 해당되는 생활인프라의 공급이 필요
 -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로 도시내 생태축·녹지축, open space,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 대한 수요 증대
- 국토교통부도 상기와 같은 도시정책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관련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²¹⁾
 - 지금까지는 양적 경제성장 지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생활인프라

21) 국토교통부(2013),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실현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

라 공급 확대 및 도시재생을 위한 SOC 투자 확대 추진

- 지금까지는 주로 상품수출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왔으나, 글로벌시대에 대응하여 공간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 공간수출이란 외국의 인재와 자본, 관광객이 국내에서 고부가가치의 생산 또는 여가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의미
 - 따라서 대도시를 비롯하여 경제거점도시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지역거점도시의 경쟁력 강화 추진
- 지금까지는 복지의 개념을 개인 대상의 소비성 복지 중심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생활인프라 등의 공공복지와 지역복지에 대해서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
 - 급식, 의료, 교육 등의 전통적 복지는 가치재(merit goods)로 분류되나 편익이 개인에 귀속되는 사적재임.
 - 반면에 도서관, 도시공원, 산책로 등의 생활인프라는 편익이 지역내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공공재로서 공공의 복지 증진에 기여
-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최근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정책의 중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²²⁾²³⁾
 - 생활편익 증진과 안전 부문의 SOC 투자 확대
 - 낙후·오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SOC 투자 확대
 -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SOC 투자 확대
 - 노후 인프라의 안전도 제고 및 업그레이드
 -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 해소
 - 시민들의 삶의 쾌적성 증대를 위한 공원 확충
 - 상습 정체 도로구간 해소 및 도시내 도로 투자 확대

22) 박용석(2012),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SOC 투자 정책 방향

23) 박용석(2013),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상기와 같은 SOC 투자 확대 정책의 방향은 현재의 생활밀착형 SOC가 양적·질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과 함께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SOC 투자가 시민들의 생활편익 및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된 복지 증진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함.
- 국토교통부(2013)는²⁴⁾ 이에 관해 “경제기반 인프라와 국토보전 인프라에 공공투자가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활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하였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제시하고 있음.
 -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은 상태
 -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SOC 투자로 우리나라의 경제력(GDP)은 세계 15위 수준까지 상승
 - 그러나, 2011년 기준 서울의 삶의 질은 전 세계 221개 도시 중 80위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아시아에서도 낮은 수준²⁵⁾
 -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고비용의 생활구조 야기
 - 주거비 비중은 2004년 9.7%에서 2011년 10.1%로 증가
 - 교통비 비중은 2004년 11.6%에서 2011년 12.3%로 증가
 - 도시간 생활인프라 격차 심화
 - 도시공원 개소(개소/km²): 강남구(4.5) > 광진구(3.4) > 태백시(2.5)
 - 병원 개소(개소/km²): 강남구(87.2) > 광진구(41.9) > 태백시(3.3)
 - 지역간 생활인프라 격차 심화
 -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전국 71개 어린이도서관의 64.%(46개소)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위치
 - 부문별 각 시·군의 생활서비스 수준 격차가 매우 심화(표-10 참조)

24) 국토교통부(2013),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실현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

25)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2011 Quality of Living Survey)에 따르면 아시아 도시는 싱가포르 25위, 동경 46위, 홍콩 70위, 쿠알라룸푸르 76위로 삶의 질이 평가됨.

〈표-10〉 시·군별 주요 생활서비스 격차

분야	지표	단위	시·군 평균	최대 시·군	최소 시·군
주거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	78.1	96.1	34.6
	상수도보급율	%	68.7	100	10
	하수처리율	%	54.5	100	10
교통	도보15분 이내 대중교통 운행회수	회/일	18.3	83.6	4.7
	도로포장율	%	73.1	99.3	46
	도로율	%	3.1	15.2	0.7
교육	유아교육기관	개소/km ²	0.2	2.7	0.0
	초등학교	개소/km ²	0.1	1.0	0.0
	보습학원	개소/km ²	0.7	11.5	0.0
보건 의료	병원	개소/km ²	0.8	16.3	0.0
	약국	개소/km ²	0.4	6.2	0.0
	병상수	개소/천명	8.7	31.7	0.2
	의료인	명/천명	5.4	13.4	0.2
사회 복지	노인복지시설	개소/km ²	0.0	0.2	0.0
	아동보육시설	개소/km ²	0.3	6.0	0.0
정보 통신 금융	유체국	개소/km ²	0.0	0.4	0.0
	은행	개소/km ²	0.2	3.3	0.0
	인터넷 이용 인구비율	%	29.5	60.5	11.7

자료: 송미령 외(2009),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도심기능의 쇠퇴

- 신도시·신시가지 중심 도시개발로 기성시가지는 노후화, 불량주거지, 생활편의시설 부족, 불편한 교통 등 열악한 환경

- 여가·문화공간의 부족

-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 녹지 등의 시설 수요 증가
- 도시공원 면적(8.1m²/인)은 주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도시 내 주민들을 위한 여가 및 문화시설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

- 상기와 같은 문제점(지역간·도시간 격차 등) 외에도 생활밀착형 SOC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공급 부족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²⁶⁾
 - 문화시설 수준 국제비교
 - 박물관의 경우 1관당 인구수(천명)는 한국(64,473), 프랑스(51,681), 대만(44,376), 일본(21,990), 독일(19,181), 미국(18,151) 순으로 한국은 인구에 비해 박물관 시설이 부족
 - 도서관의 1관당 인구수(천명)는 한국(70,801), 대만(63,516), 일본(40,358), 미국(32,845), 프랑스(21,689), 독일(9,797) 순으로 나타나 한국의 도서관 시설도 매우 열악한 실정
 - 공원시설 수준 국제비교
 - 서울의 공원면적(km²)과 공원율(%)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높은 편이나, 인구수를 고려한 1인당 공원면적은 낮은 수준(표-11 참조)

<표-11> 세계 주요 도시별 공원시설 공급 현황

구분	서울	뉴욕	토론토	런던	베이징	베를린	테헤란	도쿄	파리
공원면적(km ²)	101	81.15	73.65	173.2	51.34	83.1	28.8	37.85	22.0
공원율(%)	16.7	9.73	11.69	10.93	0.31	9.32	2.40	6.09	20.95
1인당 공원면적(m ² /인)	9.9	10.27	29.69	24.15	4.52	24.5	4.7	4.46	10.35

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도시환경 공원통계」

- 체육시설 수준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1인당 체육시설 공급 면적은 2011년을 기준으로 3.29 m²에 불과함. 이는 IOC가 지난 2008년 조사한 생활체육지수 상위 Top 5에 위치한 캐나다, 미국, 호주, 독일, 노르웨이 등 생활체육 선진국의 약 55% 정도에 그치는 수준
- 국내외 비교 등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시설별 생활밀착형 SOC 관련 문제점은 표-12와 같이 요약됨.

26) 조판기 외(2013),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 국토연구원

〈표-12〉 생활인프라 시설 유형별 문제점

시설유형	주요 문제점 및 해결과제
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족, 지자체별 편향된 보육시설, 국공립시설의 편중과 중소도시에서의 국공립시설의 부족 등
공원시설	공원의 양적 부족,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등
교통시설	차량 중심의 보행환경과 도로구조, 대중교통의 지역간 격차 발생, 주차시설의 부족 등
의료시설	보건의료시설의 수도권 집중화, 공공보건의료 기능 취약, 보건의료시설의 관리계획 및 감시체계 부재 등
복지시설	노인복지서비스 시설운영의 개선 필요, 지역간 서비스 격차 편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부족 등
문화시설	문화회관의 운영의 질 취약, 수요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부족, 도서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이 양적으로 매우 부족, 체육시설 공급계획의 부재, 공공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배치 문제 등

자료: 조판기 외(2013),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 국토연구원

- 생활밀착형 SOC는 양적, 질적으로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도시간·지역간 격차도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해 도시민들은 생활편익과 안전 등의 차별 및 위협을 받고 있음. 따라서 생활밀착형 SOC 투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4. 전문건설업 관련 이슈

-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중요성은 상기 절에서 다양하게 언급되었으나,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생활밀착형 SOC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사업이고, 전문건설업체는 지역밀착형 기업이라는 점이 중요한 이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기업인 전문건설업체들이 생활밀착형 SOC 사업 관련 세부 이슈들에 관해 어떤 의견과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세부 이슈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인가?
 -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는 어떠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 국민 실생활의 편익 증대
 -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복지 향상
 - 취약시설의 정비에 따른 안전 확보
 -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발전 등
 - 전문건설업체가 느끼는 우리나라의 생활밀착형 SOC 관련 시설의 전반적 수준(시설 확보 및 시설의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는 어느 정도나 확대되어야 하는가?
 -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는 어떠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가?
 - 국가(중앙정부) 사업을 통한 확대
 - 지자체(시·군·구) 사업을 통한 확대
 - 공공기관 사업을 통한 확대
 - 민간투자사업 촉진을 통한 확대 등
 - 시설물의 유형으로 볼 때, 가장 우선시되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부문은 어디인가?
 - 주거시설, 교통시설, 복지시설, 여가기설, 안전시설 등
 - 국민의 생활편익과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 및 중소·전문건설업체의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SOC 세부 사업 중 가장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사업은 무엇인가?
 -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전문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 분리발주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전문공사로 발주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수주를 증대
 -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
 - 제안 또는 공모 방식을 통해 전문공사 특성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발굴
 - 지역 업체의 참여 우대 조치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조치를 통한 민간투자형 생활밀착형 SOC 사업 활성화
 - 실적공사비 제도 배제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 등
-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 관련 이슈들을 전문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인 조사·분석을 위해 우선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종류 및 유형을 재분류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사대상 중점 사업을 선별함.²⁷⁾

27)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종류 및 유형의 재분류와 중점 사업의 선별 등은 제4장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 의한 전문건설업체의 인식 및 요구는 제5장에 기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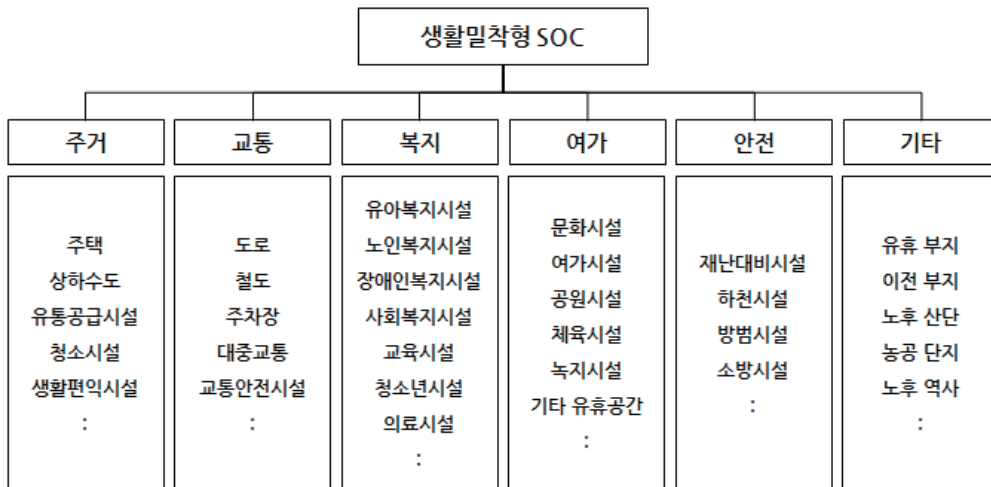
1.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종류 및 유형

- 생활밀착형 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인프라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주거·교통·복지·여가·안전시설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소규모시설이 포함됨.
- 따라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종류 및 유형은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는 유형 등을 검토해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침.
 - 우선, 각종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다양한 종류 및 유형을 파악함.
 -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분류체계를 비교·검토한 후, 본 연구의 특성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정함.
 - 별도로 정한 분류체계에 맞추어 모든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등에서 제시하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목록을 작성함(Long-list).
 - Long-list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점 사업들을 선별하기 위한 별도의 선별기준을 정함.
 - 별도의 선별기준에 따라 중점 사업을 선별함(Short-list).
 - Short-list를 활용해 전문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함.
- 국토교통부(2013)는 기존의 관련 연구자료 등을 참조해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 주택을 비롯하여 식료품·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 식당·레스토랑, 의원, 약국, 은행, 우체국, 파출소, 공원, 자치센터 등의 생활편익시설
 - 보육원, 유치원, 어린이공원, 소아과 등의 육아시설
 -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휴게시설 등 청소년시설
 - 대학교,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성인대상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 생활도로, 대중교통기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시설
-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2014. 2)」을 통해 다음과 같은 3개 부문의 도시 생활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함.
-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
 - 여가녹지, 생태놀이터, 도시숲, 도시농업공원, 자투리땅을 활용한 생활공원, 그린벨트내 자연경관을 활용한 산책길 등 녹색인프라 확충
 - 철도·도로 주변을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제공
 - 철도 폐선부지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폐도 등을 활용한 국도변 불법노점상 양성화 사업 등
 - 도심하천을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제공
 - 방치된 도심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하천 주변 오토캠핑장 등 레저시설 확충, 하천 주변 쇼핑·관광시설 활성화 추진 등
-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최근 연구(조판기 외, 2013)에서는 매우 다양한 생활밀착형 SOC 시설유형을 다음과 같이 12개 부문으로 압축하여 제시한 바 있음.
- 문화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등
 - 공원시설: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생활권 공원
 - 복지시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시설 등

- 의료시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 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
- 교통시설: 가로(보도 및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
- 유통·공급시설: 도시가스 등
- 방재시설: 저류시설 등
- 상·하수도시설: 상·하수시설
- 소비편의시설: 쇼핑센터,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 행정시설: 주민지원센터, 우체국, 경찰서 등

○ 이 밖에도 다양한 연구 등에서 생활밀착형 SOC에 관한 사업의 종류 및 시설의 유형을 제시 또는 분류하고 있음. 본 연구는 각종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특성에 맞도록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표준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6개 분류로 설정함.



[그림-7]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분류체계 설정

- 주거시설: 주택, 상하수도, 유통공급시설 등
- 교통시설: 도로, 철도, 주차장 등
- 복지(교육·의료 포함)시설: 유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등
- 여가(문화·체육 포함)시설: 문화시설, 공원·여가시설, 체육시설 등
- 안전시설: 재난대비시설, 하천시설, 방범·소방시설 등
- 기타시설: 유희부지(국·공유지) 활용, 노후 산업·공업·농공단지 재생 등

○ 본 연구는 상기의 6개 분류체계에 맞추어 모든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등에서 제시하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목록을 다음의 표-13과 같이 작성함(Long-list).

<표-13>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종류 및 유형(Long-list)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부 사업)
주거	주택	건물의 내진화,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그린 리모델링(냉·난방비 절감) 창호교체 공사, 민간보유 노후주택 재·개축으로 임대주택 공급, 현지개량형 주거환경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상하수도	노후 상하수도 개보수 등
	유통공급 시설	노후 가스관 개보수 등
	청소시설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지역 고물상 개선 등
	생활편의 시설	재래시장 개보수, 자치센터 리모델링,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교통	주차장	주차장 확충 및 개보수, 그린 파킹사업 등
	도로	도로 확충, 도시생활교통 혼잡개선, 지방도로 포장, 혼잡도로 개선,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 인프라 확충,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시설 확충, 노후 도로·교량 개보수, 골목도로 정비,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지 진출입로·정류장 설치, 순환형 도로망 구축 및 정비, 도로 취약지역 우선 확충, 차로 운영개선, 차로 신호개선, 보행이동시설 확충, 좁은 보도 정비, 전선 지중화, 지역단위 생활형 자전거도로 확충, 국도·국가하천·철도폐선 활용 자전거도로 설치,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마을·학교주변 보도 설치, 마을·지역간 단절구간 연결도로 확충 등

	철도	노후 지하철 개보수, 노후 철도교량 개보수, 지하철·경전철 확충, 철도 폐선부지 활용 시민 휴식공간 제공, 철도광장 개선(편리한 환승), 건물목 차단시설 개량 및 입체교차로 사업, 철도 취약지역 우선 확충, 철도역 대중교통 연계노선 확대 및 승강장 이전배치 등
	대중교통	대중교통 확충, 정류장 개선 및 확충, 버스 취약지역 우선 확충, 대중교통 연계환승체계 및 시설 확충, 고속도로 및 국도 환승휴게소 확대, 대중교통 중심 복합개발 유도 등
	교통안전 시설	졸음쉼터 설치, 위험도로 정비, 도로변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교통약자 관련시설 정비 등
복지 (교육·의료)	학교교육 시설	노후학교 개보수, 외국인교사용 기숙사 신·증축, 전투경찰 내무반 개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
	청소년 시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및 확충, 문화의 집 개보수 및 확충, 청소년 쉼터 확충 등
	사회교육 시설	지역밀착형 청년인큐베이터 공급 등
	병원·재활시설	소외지역 병원 및 병상수 확충,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개보수 및 확충 등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확충 등
	유아복지 시설	유치원 확충 및 개보수, 어린이집 확충 및 개보수,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의 한옥건축 지원 등
	노인복지 시설	노인주거시설(양로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확충·정비,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확충·정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확충,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 등
여가 (문화·체육)	문화시설	공연시설·전시시설·도서시설·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보급전수시설 확충, 영화관·미술관·국공립 도서관 확충 등
	여가시설	강·항구·항만 주위의 수변공간 시민 여가활동공간 개발, 강변 체육시설 및 캠핑장 조성, 도시주변 산책로 정비, 서민용 숙박시설 및 문화·체육·수련시설 설치 등
	공원시설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체육공원 확충, 동네공원(소규모 커뮤니티공원) 확충, 공원 리모델링(방재·재난대비 공간 확보), 그린벨트 내 자연경관 활용산책길·공원 조성, 도심 노후 공업단지 공원 및 녹지·주차장 개발, 미집행 공원시설 조성, 도심형 가로공원 사업 등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전문체육시설·직장체육시설 확충, 학교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학교 기본체육시설), 농어촌 체육시설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간이운동장 사업 등

	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 산책로의 정비 및 확충, 여가녹지·생태놀이터·도시숲·도시농업공원 확충 등
	기타 유휴공간	도시 텃밭, 골목길, 공공주택 조경시설, 보도내 공지 활용 등
안전	하천시설	제방 및 하천의 정비, 소하천 개수, 물 재생시설 개선, 방치된 도심하천 산책로 등을 자연형하천으로 조성, 기 정비된 하천을 오토캠핑장 등 레저활동 공간으로 조성 등
	재난대비 시설	다목적댐 및 저수지,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호안, 하굿둑, 사방공사, 우수지 및 배수펌프장, 관개시설, 우수유출 저감시설 정비, 홍수에방 시설 확충, 하수관거 정비, 빗물펌프장 및 빗물저류조 신·증설, 빗물처리장 처리용량 증설, 학교·공원·오피스빌딩 등 빗물저류조 설치대상 확대 등
	방법· 소방시설	경찰서·지구대·소방서 개보수 및 확충, 노후 소방서 개선, 방법시설 확충 등
기타	-	유휴 부지의 복합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노후 산업단지, 농공단지, 노후 공업단지 재생, 향만기능 노후화에 따른 유휴부지와 준설토 투기장 활용, 노후 철도역사 복합개발 등

2. 중점 사업의 선별

- 상기 표-13과 같이 도출된 Long-list는 매우 다양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종류 및 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점 사업의 선별이 필요함.
- 중점 사업의 선별기준을 정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 등에서 생활밀착형 SOC를 평가 또는 해석하는 기준으로 활용한 사례를 고찰함.
 - 조판기 외(2013) 연구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4대 해석요소(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요소)로 삶의 질, 접근성, 이용빈도, 공공성을 제시함.
 - 삶의 질: 생활밀착형 SOC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시설로 사회적 욕구 및 자기존중 욕구,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라는 측면
 - 접근성: 생활밀착형 SOC는 기존 도시시설 중 생산활동보다는 주

민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시설이므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

- 이용빈도: 생활밀착형 SOC는 공원, 도서관과 같이 주민이 자주 이용하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측면
 - 공공성: 생활밀착형 SOC는 좋은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조건이며 주민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본시설이므로 공공에서 공급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
- 국토교통부는 행정규칙(「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훈령 제334호, 2014.1.17)을 통해 “생활인프라는 국민 삶의 질을 윤택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정의하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생활인프라 구축의 13개 평가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상하수도 보급 정도: 상·하수도 보급률
 - 쓰레기 재활용 정도: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 문화체육시설 확충 정도: 1인당 문화체육시설 연면적
 - 공원녹지 조성 정도: 1인당 공원(친수공간 포함) 조성 면적
 - 주민만남의장 조성 정도: 1인당 커뮤니티회랑²⁸⁾ 조성 면적
 -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정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 교통약자 안전성 제고 정도: 전체 예산 대비 교통약자를 위한 재원 투자 비율
 - 적정 주차공간 확보 정도: 승용차 등록대수 당 주거지역내 주차면수
 - 보육원·유치원 공급 정도: 전체 영유아, 아동수 대비 공립 보육원 및 유치원 수용인원
 - 초등학교 공급 정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 노인전문시설 공급 정도: 전체 노인수 대비 공립노인전문요양원 수용인원

28) 커뮤니티회랑: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탐방로), 광장, 썸지공원 등 주민의 접촉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간

- 의료 서비스 수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 재해예방시설 확충 정도: 재해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재원 비율
- 상기와 같은 직접적인 생활밀착형 SOC의 해석요소나 평가지표는 아니지만, 관련 연구문헌²⁹⁾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인프라 공급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시사점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생활인프라 공급은 지역사회가 공동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정부·지자체·지역사회·기업 등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공급자 위주 보다는 사용자를 고려한 공급 필요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시설을 활용하는지를 제대로 고려하여 공급)
 - 지역의 특성에 맞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공급 필요
 - 규모가 작고 기술력과 전문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주민 중심의 공급이 더욱 중요
 -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도 부각
- 즉,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생활편익 증진 등의 당초 목적 및 정의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자와 지역사회·기업에 대한 고려가 많아야 한다는 대표적 특성을 지님.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과 함께 기존의 생활밀착형 SOC 관련 해석요소 및 평가지표, 그리고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점 사업(Short-list)의 선별기준을 정함.
- 정의 부합성: 생활밀착형 SOC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선별
 - 사업의 명확성: 제시되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 중 추상적 사업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별
 - 사업의 유사성: 사업의 유형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종류 사업들을 하나로 묶거나 정리하여 선별
 - 참여 가능성: 지역의 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형 SOC 외에 중소규모 생활밀착형 SOC 사업 위주로 선별

29) 국토(2013.8), 특집 「삶의 질 제고와 생활인프라 확충」, 국토연구원; 민범식 외(2012), 건전한 도시생활기반 정비와 환경보전 방안, 국토연구원

- 정의 부합성, 사업의 명확성 및 유사성, 그리고 지역 및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서 다음의 표-14와 같은 생활밀착형 SOC의 중점 사업(Short-list)을 선별함.
 - 중점 사업은 6개의 대분류(주거, 교통, 복지, 여가, 안전, 기타)로 구성
 - 6개의 대분류는 다시 19개의 중분류(주택, 상하수도, 도로, 철도, 의료 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재난대비시설 등)로 세분화
 - 6개의 대분류 및 19개의 중분류에 속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최종적으로 27개 사업으로 제시
 - 이와 같이 도출된 27개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대상으로 전국의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제5장에 기술)

〈표-14〉 생활밀착형 SOC 중점 사업의 선별(Short-list)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부 사업)
주거	주택	• 노후 주택 등 주거시설 정비 사업
	상하수도	• 노후 상하수도 개보수 사업
	유통공급시설	• 노후 가스관 개보수 사업
	생활편익시설	• 재래시장 개보수 사업
교통	주차장	• 주차장 확충·정비 사업
	도로	• 도로(혼잡도로, 지방도로 등) 확충·정비 사업 • 보도 및 보행이용시설 확충·정비 사업 •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확충·개선 사업
	철도	• 노후 철도·지하철시설 개선 사업
	대중교통	• 버스 이용시설 개선 사업
복지 (교육·의료)	학교교육시설	• 노후 학교 개보수 사업
	아동·청소년시설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
	유아복지시설	• 보육시설 확충·정비 사업
	노인복지시설	• 노인 의료 및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
	의료시설	• 보건소 등 지역의료시설 확충·정비 사업
여가 (문화·체육)	문화시설	• 지역 문화시설 확충·정비 사업
	공원·여가시설	• 산책길·녹지·도시공원 조성 사업 • 하천 주변공간 활용 사업 • 캠핑장 등 레저활동 공간 조성 사업
	체육시설	• 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안전	하천시설	• 하천·제방·수로 정비 사업
	재난대비시설	• 홍수 예방시설 확충·정비 사업 • 노후 시설물 재난대비 개보수 사업
	방범·소방시설	• 방범시설 확충·정비 사업
기타	-	• 노후 산업·공업·농공단지 재생 사업 • 폐도·철도폐선 활용 사업 • 유휴 부지(국공유지) 활용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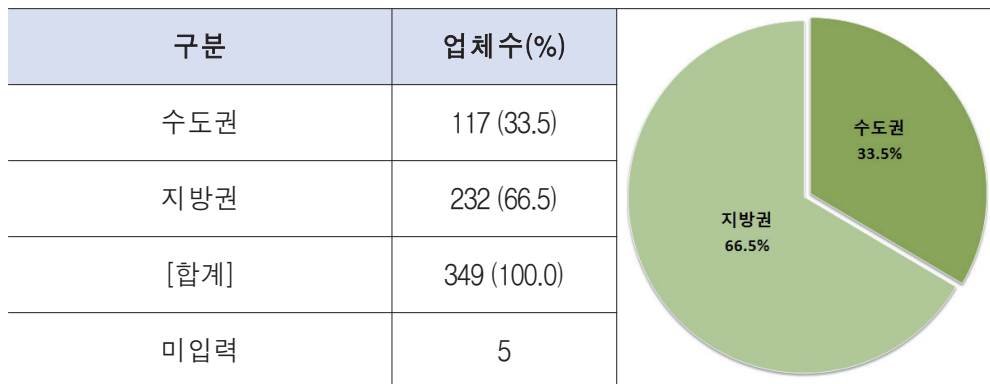
1. 조사 개요

-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관한 전문건설업체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전문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앞으로의 개선방향과 정책건의 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전문건설업체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조사」라는 제목으로 수행된 본 설문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설문기간
 - 2014. 7. 30 ~ 8. 14 (15일간)
 - 설문대상
 - 대한전문건설협회 16개 전국 시·도회 소속 전체 회원사
(※ 1개 업체당 1부씩 설문)
 - 설문방법
 -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
 - 설문문항
 -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투자 확대 방안, 정책 요구사항 등 12개 문항으로 구성³⁰⁾
- 본 조사는 모두 354부의 응답된 설문서를 회수하여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자세한 응답자(업체) 정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설문에 응답한 전문건설업체들의 33.5%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하였고 66.5%는 지방에 위치한 업체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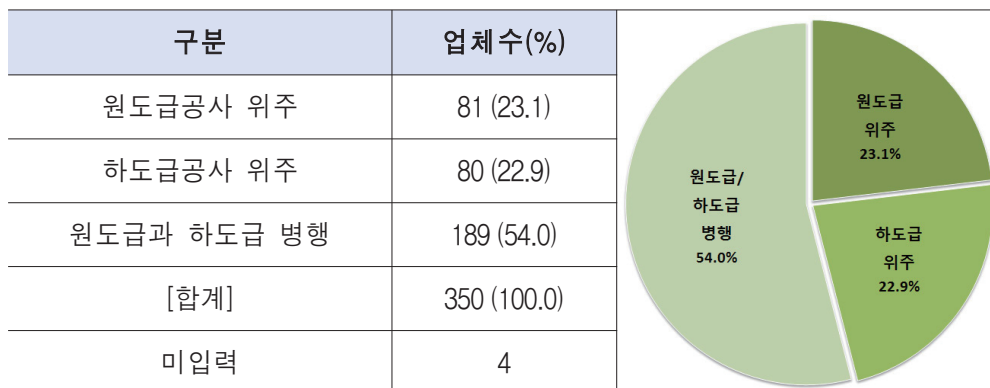
30) 설문문항의 자세한 사항은 부록의 「설문조사서」 참조

- 설문에 응답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주된 시공 영역은 원도급공사 위주가 전체의 23.1%, 하도급공사 위주가 22.9%였으며, 원도급과 하도급 공사를 병행하는 업체는 전체의 54.0%로 나타남.
- 설문에 응답한 전문건설업체들의 평균적인 연간 매출액 규모는 100억 원 이상이 전체의 7.4%, 10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이 10.6%, 50억 원 미만 ~ 10억원 이상이 46.9%, 10억원 미만이 35.1%로 나타남.
- 응답 업체의 위치(지역) 및 주된 시공 영역, 그리고 연간 매출액 규모는 전체 전문건설업계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본 설문조사에서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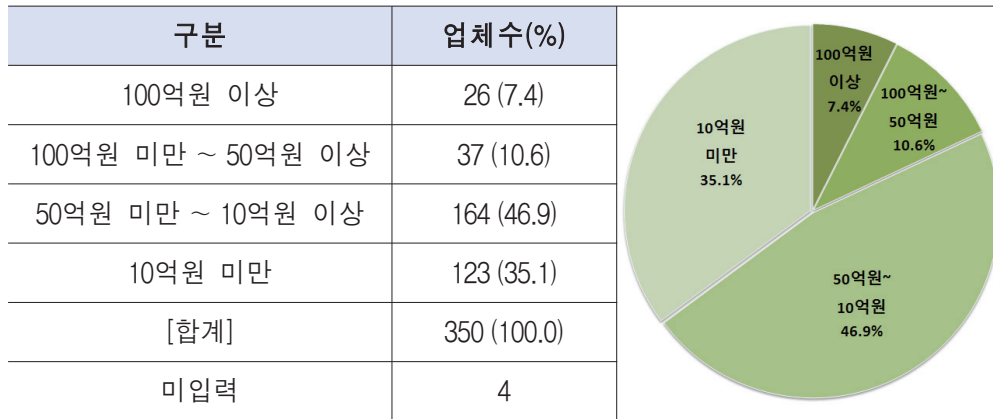
〈표-15〉 응답 업체의 위치(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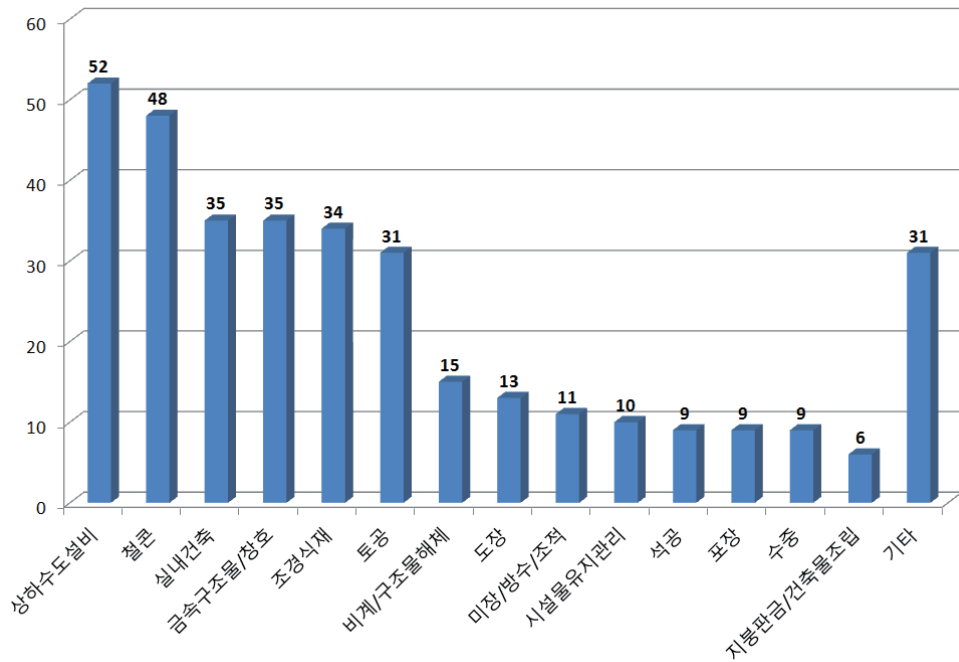
〈표-16〉 응답 업체의 시공 영역



〈표-17〉 응답 업체의 평균적인 연간 매출액



- 설문에 응답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주력(대표) 업종은 상하수도설비(52개), 철근·콘크리트(48개), 실내건축(35개), 금속구조물·창호(35개), 조경식재(34개), 토공(31개)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8〕 응답 업체의 주력(대표) 업종

2. 조사 및 분석 결과

- 전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본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8개 부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전체 354부에 대한 응답 결과 분석과 함께 응답 업체의 위치(수도권, 지방권), 시공 영역(원도급 위주, 하도급 위주, 원·하도급 병행) 및 연간 매출액 규모(50억원 이상, 50억원 ~ 10억원, 10억원 미만)별 응답의 차이를 비교·검토하였음.

- 1)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참여 경험
- 2)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밀착형 SOC 시설 수준
- 3)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의 필요성 및 의미(효과)
- 4)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요구 수준
- 5) 정부가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확대할 경우 바람직한 투자 형태
- 6) 가장 우선시되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부문
- 7) 가장 우선시되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사업³¹⁾
- 8)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조치³²⁾

- 우선, 생활밀착형 SOC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2.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47.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지방권보다는 수도권 업체의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20.1%를 차지함에 따라 아직 전문건설업체들은 생활밀착형 SOC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음.

- 시공 영역에 따른 설문 응답의 구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31) 전체 27개의 보기(생활밀착형 SOC 사업) 중 최대 5개 까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함.

32) 전체 8개(기타 포함)의 보기(정책적 조치) 중 최대 3개 까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함.

-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미만의 소형 업체일수록 생활밀착형 SOC 참여 경험도 다소 적었고, 생활밀착형 SOC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18〉 생활밀착형 SOC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의 참여 경험(지역별 분류)

(단위: 업체수, (%))

구분	수도권	지방권	[전체]
그렇다	43 (38.1)	68 (29.6)	111 (32.4)
그렇지 않다	47 (41.6)	116 (50.4)	163 (47.5)
잘 모르겠다	23 (20.4)	46 (20.0)	69 (20.1)
[합계]	113 (100.0)	230 (100.0)	343 (100.0)

〈표-19〉 생활밀착형 SOC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의 참여 경험(규모별 분류)³³⁾

(단위: 업체수, (%))

구분	50억원 이상	50억원 ~ 10억원	10억원 미만	[전체]
그렇다	24 (38.1)	51 (31.7)	38 (31.1)	113 (32.7)
그렇지 않다	31 (49.2)	83 (51.6)	50 (41.0)	164 (47.4)
잘 모르겠다	8 (12.7)	27 (16.8)	34 (27.9)	69 (19.9)
[합계]	63 (100.0)	161 (100.0)	122 (100.0)	346 (100.0)

- 현재 우리나라 생활밀착형 SOC 관련 시설의 전반적인 수준(시설 확보 및 시설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취약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이 36.7%,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13.4%로 나타남.
- 반면, 현재의 생활밀착형 SOC 시설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은 전체의 8.5%에 불과함.

33) 표-18과 표-19와 같이 ‘전체’ 집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일부의 응답자들이 분류정보(응답 업체의 위치, 시공 영역, 연간 매출액)를 일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임.

- 상대적으로 SOC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원도급 위주 업체일수록 매우 취약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20〉 우리나라 생활밀착형 SOC 시설의 전반적인 수준(영역별 분류)

(단위: 업체수, (%))

구분	원도급 위주	하도급 위주	원·하도급 병행	[전체]
매우 양호한 수준	0 (0.0)	0 (0.0)	2 (1.1)	2 (0.6)
비교적 양호한 수준	2 (2.5)	5 (6.5)	20 (10.7)	27 (7.9)
보통 수준	28 (35.4)	36 (46.8)	62 (33.2)	126 (36.7)
비교적 취약한 수준	36 (45.6)	28 (36.4)	77 (41.2)	141 (41.1)
매우 취약한 수준	13 (16.5)	8 (10.4)	25 (13.4)	46 (13.4)
기타	0 (0.0)	0 (0.0)	1 (0.5)	1 (0.3)
[합계]	79 (100.0)	77 (100.0)	187 (100.0)	343 (100.0)

-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가 꼭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응답(76.8%)을 많이 함.
 - 하도급 위주의 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원도급 위주 또는 원·하도급 병행 업체가 ‘그렇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하도급 위주 업체는 비교적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지역별 구분과 연간 매출액 규모별 구분에서도 유사한 응답으로 나타남.

〈표-21〉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필요성(영역별 분류)

(단위: 업체수, (%))

구분	원도급 위주	하도급 위주	원·하도급 병행	[전체]
그렇다	59 (75.6)	55 (69.6)	151 (80.3)	265 (76.8)
그렇지 않다	2 (2.6)	1 (1.3)	2 (1.1)	5 (1.4)
잘 모르겠다	17 (21.8)	23 (29.1)	35 (18.6)	75 (21.7)
[합계]	78 (100.0)	79 (100.0)	188 (100.0)	345 (100.0)

○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가 어떤 측면에서 가장 의미(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복지 향상’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발전’이 28.2%, ‘취약시설의 정비에 따른 안전 확보’가 18.9%로 나타남.

- 지방권 업체는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복지 향상’과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발전’을 중요하게 꼽았고,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는 ‘국민 실생활의 편익 증대’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꼽음.

〈표-22〉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의미(효과)(지역별 분류)

(단위: 업체수, (%))

구분	수도권	지방권	[전체]
국민 실생활의 편익 증대	26 (22.6)	36 (15.7)	62 (18.0)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복지 향상	34 (29.6)	85 (37.1)	119 (34.6)
취약시설의 정비에 따른 안전 확보	24 (20.9)	41 (17.9)	65 (18.9)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발전	30 (26.1)	67 (29.3)	97 (28.2)
기타	1 (0.9)	0 (0.0)	1 (0.3)
[합계]	115 (100.0)	229 (100.0)	344 (100.0)

〈표-23〉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의미(효과)(영역별 분류)

(단위: 업체수, (%))

구분	원도급 위주	하도급 위주	원·하도급 병행	[전체]
국민 실생활의 편익 증대	13 (16.5)	14 (17.7)	35 (18.7)	62 (18.0)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복지 향상	18 (22.8)	36 (45.6)	65 (34.8)	119 (34.5)
취약시설의 정비에 따른 안전 확보	20 (25.3)	11 (13.9)	34 (18.2)	65 (18.8)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발전	27 (34.2)	18 (22.8)	53 (28.3)	98 (28.4)
기타	7 (12.1)	2 (1.6)	6 (3.4)	15 (4.0)
[합계]	79 (100.0)	79 (100.0)	187 (100.0)	345 (100.0)

- 반면, 하도급 위주 업체는 ‘복지 향상’을 중요하게 꼽았지만, 원도급 위주 업체는 상대적으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발전’과 ‘안전 확보’를 더 중요하게 꼽았음.
-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는 큰 특이사항은 없으나 10억원 미만의 소형 업체들은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발전’이 가장 중요(36.1%)하다고 하였으나, 대형 업체일수록 ‘복지 향상’의 중요성을 높게 꼽음.
-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가 현재 대비 어느 정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재 대비 50% 이상 투자 확대’ 응답이 가장 높게(38.6%) 나타났고, ‘현재 대비 20% 이상 투자 확대’가 32.5%로 그 다음을 차지함.
 - ‘현재 대비 100%(2배) 이상 투자 확대’ 의견도 24.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현행 투자 수준 유지’ 응답은 전체의 5.0%에 불과함.
 -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미만의 소형 업체는 ‘현재 대비 100%(2배) 이상 투자 확대’ 요구가 가장 컸으나(32.5%), 대형 업체일수록 ‘현재 대비 20% 이상 투자 확대’라는 현실적인 요구를 선택함.

〈표-24〉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수준(규모별 분류)

(단위: 업체수, (%))

구분	50억원 이상	50억원 ~ 10억원	10억원 미만	[전체]
현행 투자 수준 유지	6 (9.7)	7 (4.4)	4 (3.3)	17 (5.0)
현재 대비 20% 이상 투자 확대	24 (38.7)	58 (36.3)	29 (24.2)	111 (32.5)
현재 대비 50% 이상 투자 확대	20 (32.3)	64 (40.0)	48 (40.0)	132 (38.6)
현재 대비 100%(2배) 이상 투자 확대	12 (19.4)	31 (19.4)	39 (32.5)	82 (24.0)
[합계]	62 (100.0)	160 (100.0)	120 (100.0)	342 (100.0)

- 정부가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확대할 경우 어떤 형태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시·군·구) 사업을 통한 확대’를 가장 선호함(63.3%).

- 그 다음으로는 ‘국가(중앙정부) 사업을 통한 확대’(14.1%)와 ‘민간투자 사업 촉진을 통한 확대’(12.3%)를 선호하였고, ‘공공기관 사업을 통한 확대’를 가장 부정적(10.3%)으로 바라보고 있었음.
- 반면, 수도권 업체는 상대적으로 지방권 업체보다 ‘국가(중앙정부) 사업을 통한 확대’를 선호함.
-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의 소형 업체는 절대적으로 ‘지자체(시·군·구) 사업을 통한 확대’(71.9%)를 선호하고 있었으나, 대형 업체는 ‘국가(중앙정부) 사업을 통한 확대’와 ‘민간투자사업 촉진을 통한 확대’에 대한 선호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음.

〈표-25〉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의 바람직한 형태(지역별 분류)

(단위: 업체수, (%))

구분	수도권	지방권	[전체]
국가(중앙정부) 사업을 통한 확대	23 (20.2)	25 (11.0)	48 (14.1)
지자체(시·군·구) 사업을 통한 확대	59 (51.8)	157 (69.2)	216 (63.3)
공공기관 사업을 통한 확대	13 (11.4)	22 (9.7)	35 (10.3)
민간투자사업 촉진을 통한 확대	19 (16.7)	23 (10.1)	42 (12.3)
[합계]	114 (100.0)	227 (100.0)	341 (100.0)

〈표-26〉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의 바람직한 형태(규모별 분류)

(단위: 업체수, (%))

구분	50억원 이상	50억원 ~ 10억원	10억원 미만	[전체]
국가(중앙정부) 사업을 통한 확대	12 (19.7)	23 (14.2)	13 (10.7)	48 (14.0)
지자체(시·군·구) 사업을 통한 확대	32 (52.5)	101 (62.3)	87 (71.9)	220 (64.0)
공공기관 사업을 통한 확대	7 (11.5)	17 (10.5)	11 (9.1)	35 (10.2)
민간투자사업 촉진을 통한 확대	10 (16.4)	21 (13.0)	10 (8.3)	41 (11.9)
[합계]	61 (100.0)	162 (100.0)	121 (100.0)	344 (100.0)

- 본 연구의 제4장에서 제시한 6개(기타 포함)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 부문 중 가장 우선시되는 투자 확대 부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안전시설 부문’이 25.5%, ‘복지시설 부문’이 22.3%, ‘주거시설 부문’이 20.8%의 순으로 나타남.
 - 기존 SOC의 가장 주류를 차지했던 ‘주거시설 부문’은 20.8%의 응답으로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낮게 나타남.
 - 수도권 업체는 ‘안전시설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가장 높게 요구했고, 지방권 업체는 ‘복지시설 부문’ 투자를 가장 높게 요구함.

〈표-27〉 가장 우선시되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부문(지역별 분류)

(단위: 업체수, (%))

구분	수도권	지방권	[전체]
주거시설 부문	26 (22.8)	45 (19.8)	71 (20.8)
교통시설 부문	23 (20.2)	33 (14.5)	56 (16.4)
복지시설 부문(교육·의료 포함)	16 (14.0)	60 (26.4)	76 (22.3)
여가시설 부문(문화·체육 포함)	11 (9.6)	37 (16.3)	48 (14.1)
안전시설 부문	38 (33.3)	49 (21.6)	87 (25.5)
기타	0 (0.0)	3 (1.3)	3 (0.9)
[합계]	114 (100.0)	227 (100.0)	341 (100.0)

〈표-28〉 가장 우선시되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부문(규모별 분류)

(단위: 업체수, (%))

구분	50억원 이상	50억원 ~ 10억원	10억원 미만	[전체]
주거시설 부문	13 (21.3)	39 (24.1)	19 (15.7)	71 (20.6)
교통시설 부문	16 (26.2)	28 (17.3)	13 (10.7)	57 (16.6)
복지시설 부문(교육·의료 포함)	13 (21.3)	33 (20.4)	30 (24.8)	76 (22.1)
여가시설 부문(문화·체육 포함)	7 (11.5)	27 (16.7)	16 (13.2)	50 (14.5)
안전시설 부문	12 (19.7)	34 (21.0)	41 (33.9)	87 (25.3)
기타	0 (0.0)	1 (0.6)	2 (1.7)	3 (0.9)
[합계]	61 (100.0)	162 (100.0)	121 (100.0)	344 (100.0)

-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의 소형 업체는 ‘안전시설 부문’과 ‘복지시설 부문’을, 그리고 50억원 이상의 대형 업체는 ‘교통시설 부문’과 ‘주거시설 부문’의 투자 요구가 높음.
- 본 연구의 제4장에서 선별한 27개 생활밀착형 SOC 중점 사업 중 가장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5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다음과 같이 도출됨.
 - 노후 시설물 재난대비 개보수 사업(8.7%)
 - 노후 주택 등 주거시설 정비 사업(8.2%)
 - 노후 상하수도 개보수 사업(7.1%)
 - 주차장 확충·정비 사업(7.0%)
 - 도로(혼잡도로, 지방도로 등) 확충·정비 사업(5.9%)
 - 수도권 업체는 ‘노후 시설물 재난대비 개보수 사업’(10.4%)에 대한 투자 확대 요구가 더욱 높았고, 상기의 우선순위가 높은 5개 사업 외에 ‘노후 학교 개보수 사업’(6.5%)의 투자 확대를 요구함.
 - 지방권 업체는 전체 응답 결과(우선순위가 높은 5개 사업)와 동일한 응답 결과를 보였으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는 ‘노후 주택 등 주거시설 정비 사업’(8.0%)을 꼽음.
 - 하도급 위주 업체 또한 전체 응답 결과와 동일한 응답 결과를 보였으나, 원도급 위주 업체는 우선순위 5위 안에 ‘노후 학교 개보수 사업’(7.1%),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6.5%)이 포함됨.
 - 또한,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의 소형 업체 응답의 우선순위 5위 안에는 ‘하천·제방·수로 정비 사업’(6.9%)이 포함됨. (표-29 ~ 31 참조)

〈표-29〉 가장 우선시 되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사업(지역별 분류)

(단위: 업체수, (%))

구분	수도권	지방권	[전체]
노후 주택 등 주거시설 정비 사업	45 (8.6)	85 (8.0)	130 (8.2)
노후 상하수도 개보수 사업	39 (7.5)	73 (6.9)	112 (7.1)
노후 가스관 개보수 사업	12 (2.3)	17 (1.6)	29 (1.8)
재래시장 개보수 사업	7 (1.3)	17 (1.6)	24 (1.5)
주차장 확충·정비 사업	27 (5.2)	83 (7.8)	110 (7.0)
도로(혼잡/지방도로 등) 확충·정비 사업	28 (5.4)	66 (6.2)	94 (5.9)
보도 및 보행이용시설 확충·정비 사업	18 (3.5)	41 (3.9)	59 (3.7)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개선 사업	7 (1.3)	22 (2.1)	29 (1.8)
노후 철도·지하철시설 개선 사업	24 (4.6)	9 (0.8)	33 (2.1)
버스 이용시설 개선 사업	4 (0.8)	7 (0.7)	11 (0.7)
노후 학교 개보수 사업	34 (6.5)	50 (4.7)	84 (5.3)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	20 (3.8)	56 (5.3)	76 (4.8)
보육시설 확충·정비사업	18 (3.5)	28 (2.6)	46 (2.9)
노인 의료 및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	22 (4.2)	48 (4.5)	70 (4.4)
보건소 등 지역 의료시설 확충·정비 사업	13 (2.5)	24 (2.3)	37 (2.3)
지역 문화시설 확충·정비사업	10 (1.9)	37 (3.5)	47 (3.0)
산책길·녹지·도시공원 조성 사업	13 (2.5)	51 (3.5)	64 (4.0)
하천 주변공간 활용 사업	17 (3.3)	46 (4.3)	63 (4.0)
캠핑장 등 레저활동 공간 조성 사업	8 (1.5)	17 (1.6)	25 (1.6)
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16 (3.1)	33 (3.1)	49 (3.1)
하천·제방·수로 정비 사업	24 (4.6)	52 (4.9)	76 (4.8)
홍수 예방시설 확충·정비 사업	20 (3.8)	38 (3.6)	58 (3.7)
노후 시설물 재난대비 개보수 사업	54 (10.4)	84 (7.9)	138 (8.7)
방범시설 확충·정비 사업	14 (2.7)	22 (2.1)	36 (2.3)
노후 산업·공업·농공단지 재생 사업	10 (1.9)	17 (1.6)	27 (1.7)
폐도·철도폐선 활용 사업	4 (0.8)	8 (0.8)	12 (0.8)
유희 부지(국·공유지) 활용 사업	13 (2.5)	29 (2.7)	42 (2.7)
[합계]	521 (100.0)	1,060 (100.0)	1,581 (100.0)

주: 상기 표에서 가장 응답이 높게 나온 부분(우선순위 1위 ~5위)은 ‘음영’으로 표기함.

〈표-30〉 가장 우선시 되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사업(영역별 분류)

(단위: 업체수, %)

구분	원도급 위주	하도급 위주	원·하도급 병행	[전체]
노후 주택 등 주거시설 정비 사업	28 (7.6)	28 (7.8)	75 (8.8)	131 (8.3)
노후 상하수도 개보수 사업	33 (9.0)	18 (5.0)	61 (7.1)	112 (7.1)
노후 가스관 개보수 사업	7 (1.9)	10 (2.8)	12 (1.4)	29 (1.8)
재래시장 개보수 사업	4 (1.1)	3 (0.8)	17 (2.0)	24 (1.5)
주차장 확충·정비 사업	23 (6.3)	28 (7.8)	59 (6.9)	110 (6.9)
도로(혼잡/지방도로 등) 확충·정비 사업	17 (4.6)	31 (8.6)	47 (5.5)	94 (6.0)
보도 및 보행이용시설 확충·정비 사업	12 (3.5)	12 (3.3)	35 (4.1)	59 (3.7)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개선 사업	4 (1.1)	6 (1.7)	19 (2.2)	29 (1.8)
노후 철도·지하철시설 개선 사업	5 (1.4)	14 (3.9)	14 (1.6)	33 (2.1)
버스 이용시설 개선 사업	0 (0.0)	2 (0.6)	9 (1.1)	11 (0.7)
노후 학교 개보수 사업	26 (7.1)	14 (3.9)	44 (5.1)	84 (5.3)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	24 (6.5)	16 (4.4)	36 (4.2)	76 (4.8)
보육시설 확충·정비사업	14 (3.8)	8 (2.2)	24 (2.8)	46 (2.9)
노인 의료 및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	17 (4.6)	14 (3.9)	39 (4.6)	70 (4.4)
보건소 등 지역 의료시설 확충·정비 사업	13 (3.5)	10 (2.8)	14 (1.6)	37 (2.3)
지역 문화시설 확충·정비사업	11 (3.0)	14 (3.9)	22 (2.6)	47 (3.0)
산책길·녹지·도시공원 조성 사업	10 (2.7)	17 (4.7)	37 (4.3)	64 (4.0)
하천 주변공간 활용 사업	8 (2.2)	10 (2.8)	45 (5.3)	63 (4.0)
캠핑장 등 레저활동 공간 조성 사업	4 (1.1)	6 (1.7)	15 (1.8)	25 (1.6)
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11 (3.0)	8 (2.2)	30 (3.5)	49 (3.1)
하천·제방·수로 정비 사업	20 (5.4)	11 (3.1)	45 (5.3)	76 (4.8)
홍수 예방시설 확충·정비 사업	11 (3.0)	16 (4.4)	31 (3.6)	58 (3.7)
노후 시설물 재난대비 개보수 사업	40 (10.9)	32 (8.9)	66 (7.7)	138 (8.7)
방범시설 확충·정비 사업	9 (2.5)	9 (2.5)	18 (2.1)	36 (2.3)
노후 산업·공업·농공단지 재생 사업	6 (1.6)	10 (2.8)	11 (1.3)	27 (1.7)
폐도·철도폐선 활용 사업	3 (0.8)	2 (0.6)	7 (0.8)	12 (0.8)
유희 부지(국·공유지) 활용 사업	7 (1.9)	11 (3.1)	25 (2.9)	43 (2.7)
[합계]	367 (100.0)	360 (100.0)	857 (100.0)	1,584 (100.0)

주: 상기 표에서 가장 응답이 높게 나온 부분(우선순위 1위 ~ 5위)은 '음영'으로 표기함.

〈표-31〉 가장 우선시 되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사업(규모별 분류)

(단위: 업체수, %)

구분	50억원 이상	50억원 ~ 10억원	10억원 미만	[전체]
노후 주택 등 주거시설 정비 사업	30 (10.8)	66 (8.8)	35 (6.3)	131 (8.3)
노후 상하수도 개보수 사업	15 (5.4)	51 (6.8)	46 (8.3)	112 (7.1)
노후 가스관 개보수 사업	7 (2.5)	14 (1.9)	9 (1.6)	30 (1.9)
재래시장 개보수 사업	4 (1.4)	13 (1.7)	7 (1.3)	24 (1.5)
주차장 확충·정비 사업	15 (5.4)	58 (7.7)	38 (6.9)	111 (7.0)
도로(혼잡/지방도로 등) 확충·정비 사업	19(6.8)	42 (5.6)	34 (6.1)	95 (6.0)
보도 및 보행이용시설 확충·정비 사업	9 (3.2)	25 (3.3)	24 (4.3)	58 (3.7)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개선 사업	6 (2.2)	13 (1.7)	9 (1.6)	28 (1.8)
노후 철도·지하철시설 개선 사업	12 (4.3)	14 (1.9)	7 (1.3)	33 (2.1)
버스 이용시설 개선 사업	1 (0.4)	5 (0.7)	5 (0.9)	11 (0.7)
노후 학교 개보수 사업	11 (3.9)	45 (6.0)	27 (4.9)	83 (5.2)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	11 (3.9)	39 (5.2)	26 (4.7)	76 (4.8)
보육시설 확충·정비사업	11 (3.9)	21 (2.8)	14 (2.5)	46 (2.9)
노인 의료 및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	14 (5.0)	32 (4.3)	24 (4.3)	70 (4.4)
보건소 등 지역 의료시설 확충·정비 사업	10 (3.6)	17 (2.3)	10 (1.8)	37 (2.3)
지역 문화시설 확충·정비사업	6 (2.2)	22 (2.9)	18 (3.3)	46 (2.9)
산책길·녹지·도시공원 조성 사업	8 (2.9)	31 (4.1)	25 (4.5)	64 (4.0)
하천 주변공간 활용 사업	8 (2.9)	29 (3.9)	28 (5.1)	65 (4.1)
캠핑장 등 레저활동 공간 조성 사업	2 (0.7)	14 (1.9)	9 (1.6)	25 (1.6)
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7 (2.5)	24 (3.2)	18 (3.3)	49 (3.1)
하천·제방·수로 정비 사업	14 (5.0)	24 (3.2)	38 (6.9)	76 (4.8)
홍수 예방시설 확충·정비 사업	10 (3.6)	28 (3.7)	20 (3.6)	58 (3.7)
노후 시설물 재난대비 개보수 사업	23 (8.2)	67 (8.9)	46 (8.3)	136 (8.6)
방범시설 확충·정비 사업	6 (2.2)	21 (2.8)	10 (1.8)	36 (2.3)
노후 산업·공업·농공단지 재생 사업	8 (2.9)	15 (2.0)	4 (0.7)	27 (1.7)
폐도·철도폐선 활용 사업	3 (1.1)	5 (0.7)	4 (0.7)	12 (0.8)
유희 부지(국·공유지) 활용 사업	9 (3.2)	17 (2.3)	18 (3.3)	44 (2.8)
[합계]	279 (100.0)	752 (100.0)	553 (100.0)	1,584 (100.0)

주: 상기 표에서 가장 응답이 높게 나온 부분(우선순위 1위 ~ 5위)은 '음영'으로 표기함.

- ‘상기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선별한 27개 생활밀착형 SOC 중점 사업 외에 설문 응답자인 전문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업종의 참여 및 발전을 위해 확대되기를 바라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³⁴⁾

〈표-32〉 전문건설업이 제안하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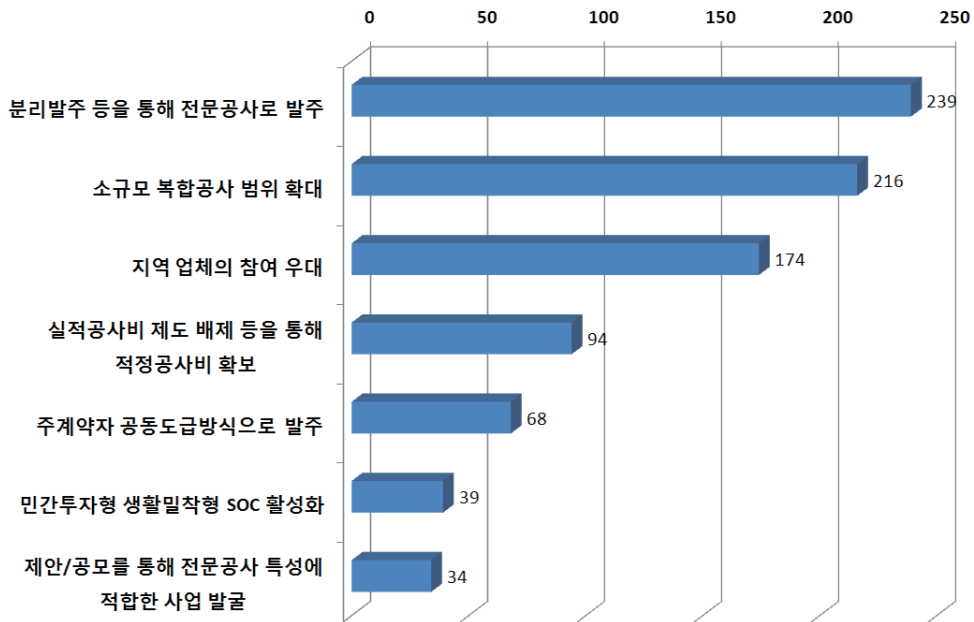
부문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의 보온·단열 성능개선 사업 •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 • 지역 단위 오수·분뇨 처리시설 확충 사업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 사업 • 담장 허물기 및 그린파킹 조성 사업
복지 (교육·의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중년 복지시설 조성 사업 • 농어촌 영농 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
여가 (문화·체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 주변공간 활용 사업 • 4대강 수질개선 사업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지역 해일발생시 안전·구명시설 설치 사업 •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 사업 • 장기적 가뭄 대비시설 조성 사업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가 및 무허가시설물 철거·정비 사업

-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됨.

- 분리발주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27.7%)이 가장 높음.

34) 본 연구에서 선별한 27개 중점 사업 이외의 생활밀착형 SOC 관련 사업들이 추가로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일부의 응답은 27개 중점 사업에 포함되지만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응답임.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수주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25.0%)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지역업체의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20.1%)도 비교적 높게 나옴.
- 이 밖에, 실적공사비 제도 배제 등을 통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10.9%)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의견(7.9%)이 있었음.
- 반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조치를 통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활발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4.5%)과 제안 또는 공모 방식을 통해 전문공사 특성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3.9%)은 낮게 나타남.



[그림-9]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조치

〈표-33〉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조치(지역별 분류)

(단위: 업체수, (%))

구분	수도권	지방권	[전체]
분리발주 등을 통한 전문공사 발주	81 (29.1)	158 (27.0)	239 (27.7)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64 (23.0)	152 (25.9)	216 (25.0)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	25 (9.0)	43 (7.3)	68 (7.9)
제안 또는 공모를 통한 전문공사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12 (4.3)	22 (3.8)	34 (3.9)
지역 업체의 참여 우대	45 (16.2)	129 (22.0)	174 (20.1)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조치	17 (6.1)	22 (3.8)	39 (4.5)
실적공사비 배제 등 적정공사비 확보	34 (12.2)	60 (10.2)	94 (10.9)
[합계]	278 (100.0)	586 (100.0)	864 (100.0)

〈표-34〉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조치(규모별 분류)

(단위: 업체수, (%))

구분	50억원 이상	50억원 ~ 10억원	10억원 미만	[전체]
분리발주 등을 통한 전문공사 발주	40 (27.0)	110 (27.0)	91 (29.3)	241 (27.8)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36 (24.3)	105 (25.7)	74 (23.8)	215 (24.8)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	16 (10.8)	31 (7.6)	22 (7.1)	69 (8.0)
제안 또는 공모를 통한 전문공사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12 (8.1)	17 (4.2)	6 (1.9)	35 (4.0)
지역 업체의 참여 우대	21 (14.2)	81 (19.9)	72 (23.2)	174 (20.1)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조치	8 (5.4)	19 (4.7)	12 (3.9)	39 (4.5)
실적공사비 배제 등 적정공사비 확보	15 (10.1)	45 (11.0)	34 (10.9)	94 (10.8)
[합계]	148 (100.0)	408 (100.0)	311 (100.0)	867 (100.0)

- 전체적으로는 그림-9와 같은 우선순위가 나왔으나, 표-33과 같이 지방권 업체는 ‘지역 업체의 참여 우대’를, 수도권 업체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조치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공 영역별(원도급 위주, 하도급 위주, 원·하도급 병행)로는 유의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음.
 - 그러나 표-34와 같이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 소형 업체일수록 ‘지역 업체의 참여 우대’를, 대형 업체일수록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 ‘제안 또는 공모를 통한 전문공사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조치’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정책적 조치 외에도 전문건설업체들은 본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지역의 현안 및 문제점을 지역 업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지역 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조사·발굴해야 함.
 - 영세·부실 업체들의 덤핑입찰을 제지할 필요성이 있음.
 - 소규모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적용 확대 조치가 필요함.
 - 노임단가를 현실화하여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해야 함.
 - 무분별한 ‘물품구매(현장설치도)’ 발주를 지양하고, 공사적인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함.
 - 생활밀착형 SOC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

1. 생활밀착형 SOC 투자 방향

- 본 연구는 354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밀착형 SOC 투자 개선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정부 또는 기존의 연구가 제시하는 생활밀착형 SOC 정책방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정책방향들과 연계가 된 본 연구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 국토교통부(2013)는 “살기 좋은 마을, 걷고 싶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SOC를 확충하여 저비용 도시구조 및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함.³⁵⁾
 - 생활인프라의 계획적 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생활밀착형 SOC의 현황조사 및 평가,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 계획적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의 실생활을 반영한 생활권별 인프라 정비
 - 일상생활권과 광역생활권을 구분해 실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권별 생활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함.³⁶⁾
 - 생활인프라의 계획적·체계적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정비
 -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일상생활권 설정을 의무화하고, 주

35) 국토교통부(2013),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실현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

36) ‘일상생활권’은 도보·시내버스로 생활 가능한 커뮤니티 단위의 권역을 뜻하며, ‘광역생활권’은 복수 지자체로 구성되는 광역 단위의 권역을 뜻함.

변의 시·군과 공동으로 광역생활권 설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인프라의 목표수준에 관한 정부의 지침 제공
 -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등에서 생활권 별 생활인프라 목표수준 등 지침을 제시하도록 함.
-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범부처적 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
 - 생활인프라는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으므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기구의 범부처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와 주민의 주도적 참여에 의한 도시재생 추진 등
 - 공동체·생활권 단위에서의 양극화 해소,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주도하는 근린재생 추진이 필요함.
 - 주민 참여를 통해 복지, 문화, 주거 등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함.
- 한편,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행복도 제고 및 장기적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 전략이 제시되고 있음.³⁷⁾
 -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접근
 - 단순한 SOC 물량 확대를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댐질식 건설투자를 지양하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필요
 -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을 병행
 - 양적인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기존 인프라의 업그레이드·고품질화·안전도 향상을 위한 투자 필요
 - 삶의 질과 시민들의 행복 제고

37) 김영덕(2014), 서울시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고, 일상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 투자 필요
- 도시안전 등 사회적 니즈에 부합
 - 도시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투자 필요
- 미래성장에 기여
 -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필요
- 국토연구원(2013)은 관련 연구문헌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활밀착형 SOC의 주요 시설유형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³⁸⁾
 - 보육시설 정책방향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이 필요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개선 및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공원시설 정책방향
 - 도시공원의 양적 공급 확대 및 미집행 공원시설 조성과 함께 지역간·지역내·계층간 도시공원 서비스 불균형 해소
 - 이용수요와 인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공원의 공급 필요
 - 교통시설 정책방향
 -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및 공급 확대와 환승체계를 개선하고, 보행권 중심의 생활도로 정비 및 생활권별 주차장 확충
 - 의료시설 정책방향
 - 지역간 의료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시설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시설 관리계획을 수립
 - 복지시설 정책방향
 - 복지시설의 지역간 서비스 격차 완화
 - 노인주거보복지시설의 확충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서비스) 개선

38) 조판기 외(2013),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 국토연구원

- 문화시설 정책방향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세분화 된 문화시설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프라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체육시설 정책방향
 - 기반시설 복합화 및 기존 체육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공급 효율화
 - 접근성에 우선권을 둔 공공체육공원 정책 및 생애주기에 따른 차별화된 체육시설 공급 필요
- 상기와 같은 정부 또는 기존의 연구가 제시하는 생활밀착형 SOC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전문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생활밀착형 SOC 투자 개선방향을 제안함.
 -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정책 필요
 - 현재 우리나라 생활밀착형 SOC 시설의 확보 및 시설의 질적 수준은 '비교적 취약한 수준'임.
 -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체들은 현재 대비 최소 20% 이상 ~ 최대 100%(2배) 이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생활밀착형 SOC 투자가 확대되면 1)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복지 향상, 2)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크게 기대됨.
 - 이 밖에도 취약시설의 정비에 따른 안전 확보 및 국민 실생활의 편익 증대라는 많은 투자 효과가 나타남.
 -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생활밀착형 SOC의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함.
 - 또한, 지자체는 지역주민 및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기업들과 함께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수요를 발굴해야 함.

-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우선순위 수립

- 지자체(시·군·구)를 통한 투자 확대가 가장 우선시 됨.
- 이와 함께 국가(중앙정부),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을 통한 사업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
- 부문별로는 안전 부문의 투자 확대 요구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복지 및 주거 부문의 투자 확대 요구가 뒤따랐으며, 교통 및 여가 부문이 가장 우선순위가 낮게 나옴.
- 본 연구에서 선별한 27개의 생활밀착형 SOC 세부 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표-35와 같이 8개 사업으로 제시될 수 있음.³⁹⁾

〈표-35〉 전문건설업체가 선정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 우선순위

우선 순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분류	세부 사업
1순위 (안전)	재난대비시설	• 노후 시설물 재난대비 개보수 사업
	하천시설	• 하천·제방·수로 정비 사업
2순위 (복지·주거)	주택	• 노후 주택 등 주거시설 정비 사업
	상하수도	• 노후 상하수도 개보수 사업
	학교교육시설	• 노후 학교 개보수 사업
	아동·청소년시설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
3순위 (교통·여가)	주차장	• 주차장 확충·정비 사업
	도로	• 도로(혼잡도로, 지방도로 등) 확충·정비 사업
기타	추가 제안 사업 (※ 검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지역 안전·구명시설 설치 사업 • 장기적 가뭄 대비시설 조성 사업 • 지역 단위 우수·분뇨 처리시설 확충 사업 • 농어촌 영농 편의시설 확충 사업 • 퇴직 중년 복지시설 조성 사업 • 흡연부스 등 보행이용시설 개선 사업 • 폐가 및 무허가시설물 철거·정비 사업 등

39) 최근 공원 및 체육·문화시설의 확충 정책과 함께 유아 및 노인복지 향상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제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도 제4장에서 표-14와 같이 선별한 27개 생활밀착형 SOC 사업 모두 단기 또는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인 양적 공급 확대와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각 지역에 위치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 생활밀착형 SOC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으로 소규모이면서 지역 기반의 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이와 같은 건설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주체가 각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임.
 - 지역경제의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약 20~25%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인프라 투자는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뛰어난데, 전문건설업체는 각 지역에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음.
 - 전문건설업체는 지역 인프라의 실질적 시공 주체였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한 인프라의 실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체는 지역의 인력들을 고용·활용하고 있어 지역 정서에 익숙하며, 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바라는 생활밀착형 SOC 수요를 잘 파악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체는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건설공사를 영업범위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생활밀착형 SOC의 인근 지역간(시·군·구) 격차를 잘 파악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체는 그간 대형 SOC 사업을 주로 담당했던 종합건설업체와는 달리 주로 소규모의 원도급 공사 및 하도급 공사를 주로 담당해 ‘규모는 작지만 파급영향이 큰’ 소규모 사업 발굴에 적합함.

- 이와 같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중소기업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분리발주 등을 통해 전문공사로 발주하여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여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소규모 복합공사로 많이 발주되도록 조치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수주를 늘려야 함.
 - 상기와 같은 정책적 조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하여 전문건설업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지역 업체의 사업 발굴 및 참여 우대
 -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한 지역의 업체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현안 과제(생활밀착형 SOC 사업)를 발굴하고, 필요시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상 공모’ 등을 수행함.
 - 지자체의 행정 여건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현존하는 16개의 전문건설협회 시·도회⁴⁰⁾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의 현안이 되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발굴·제안하도록 하는 조치가 매우 합리적일 수 있음.
 - 이와 같이 지자체와 지역 업체가 주도하여 사업을 발굴·제안하여야 하며, 실제 사업 시행시에는 지역 업체의 참여 우대 조치(제한경쟁, PQ 및 입찰심사 등)가 요구되고 있음.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전국 16개 시·도회가 있음.

- 불합리한 건설공사의 수행 여건 개선
 -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한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게 됨.
 - 따라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경우 실적공사비 제도의 배제 등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 노임단가 현실화, 영세·부실업체들의 덤핑입찰 제지, 시설공사의 물품구매(현장설치도) 발주 지양 및 필요시 소규모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적용 확대 등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함.
- 이 밖에도 생활밀착형 SOC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많은 지역주민과 전문건설업체들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복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2014.9.18)를 통해 2015년 SOC 예산의 정부안을 2014년보다 약 3.0% 증액된 2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SOC 예산안을 증액한 것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16년 이후는 다시 큰 폭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임.⁴¹⁾
- 더욱이 2015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은 노후 SOC 개선 등의 안전 부문 투자 규모가 늘었다는 특성이 있으나, 여전히 기존 SOC 투자와 같이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시설 부문의 대형 SOC 위주 예산은 증액된 반면, 주택·산업단지·물류·수자원·지역 및 도시 등 국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생활인프라 성격의 투자는 오히려 감액된 상황임.
- 본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SOC 투자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등이 뛰어나고 민간소비 증가 등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SOC 투자는 국민소득 향상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이와 같은 SOC 투자는 최근 ‘소비적 복지’ 예산의 증가 등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SOC 투자의 중요성이 존재함.

41)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2015년 예산은 달라질 수 있음.

- 국가경쟁력과 도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SOC 투자가 지속 또는 확대될 필요가 있음.
 - SOC 투자가 지속되지 못할 경우 기존 인프라 효율성 저하 및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중단 문제 등으로 사회·경제적 편익 손실이 우려됨.
 - 특히, 지방정부 및 지역 기반의 SOC에 대한 향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부족한 자원 문제는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신규 SOC의 양적 투자뿐 아니라 기존(노후) 인프라에 대한 개선과 재해방지 등을 위한 질적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짐.
 -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외국의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SOC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중점과제에서도 SOC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다양한 분야의 SOC 투자가 필요하지만 특히 최근에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해 국토교통부도 최근 SOC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으며, 그간 “경제기반 인프라와 국토보전 인프라에 공공투자가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활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였음.
 -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은 상태
 -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고비용의 생활구조 야기
 - 도시간·지역간 생활인프라 격차 심화
 - 도심기능의 쇠퇴 및 여가·문화공간의 부족 등
 - 이에 대해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생활편익 증진과 안전 부문의 SOC 투자 확대

- 낙후·오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SOC 투자 확대
 -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SOC 투자 확대
 - 노후 인프라의 안전도 제고 및 업그레이드
 -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 해소
 - 시민들의 삶의 쾌적성 증대를 위한 공원 확충
 - 상습 정체 도로구간 해소 및 도시내 도로 투자 확대 등
-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및 분석을 수행함.
- 6개 부문(주거, 교통, 복지, 여가, 안전, 기타)에 속한 27개의 생활밀착형 SOC 중점 사업을 선별함.
 - 상기와 같이 선별한 중점 사업 및 생활밀착형 SOC 투자 및 사업에 관한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국의 전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회수된 354부의 설문서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 및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밀착형 SOC 투자 방향과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우선, 본 연구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음.
-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정책 필요
 - 생활밀착형 SOC의 시설 수준은 '비교적 취약한 수준'이며, 현재 대비 최소 20% 이상 ~ 최대 100%(2배) 이상의 투자 확대가 필요
 - 정부는 관련 법령에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기업과 함께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수요 발굴이 필요
 -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우선순위 수립

- 지자체(시·군·구)를 통한 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
 - 1순위로는 ‘노후 시설물 재난대비 개보수 사업’, ‘하천·제방·수로 정비 사업’ 등 안전시설 부문 투자 필요
 - 2순위로는 ‘노후 주택 등 주거시설 정비 사업’, ‘노후 상하수도 개보수 사업’, ‘노후 학교 개보수 사업’ 및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 등 복지 및 주거시설 부문 투자 필요
 - 3순위로는 ‘주차장 확충·정비 사업’, ‘도로(혼잡도로, 지방도로 등) 확충·정비 사업’ 등 교통 및 여가시설 부문 투자 필요
 - 이 밖에도 전문건설업체들이 추가로 제안한 해안지역 안전시설, 가뭄 대비시설, 오수·분뇨 처리시설, 영농 편의시설, 퇴직 중년 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 검토 필요
- 전문건설업체는 각 지역에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인프라의 실질 시공 주체였으며, 인프라의 노후화 및 신규 수요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주체임.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분리발주 및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활용 등의 정책 필요
 - 지역 업체의 사업 발굴 및 참여 우대
 - 정부의 지원 하에 지자체 및 전국 16개 전문건설협회 시·도회 조직을 통해 지역의 현안이 되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발굴·제안 필요
 - 사업 시행시 지역 업체의 참여 우대 조치(제한경쟁, PQ 및 입찰심사 등) 필요

- 불합리한 건설공사의 수행 여건 개선
 -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의 여건 마련 필요

- 최근 들어 안전과 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져 있음. 정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2015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생산적 복지의 실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신념을 갖고 SOC 정책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 국토(2013.3), 특집 「신 SOC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 국토(2013.8), 특집 「삶의 질 제고와 생활인프라 확충」, 국토연구원
- 국토교통부(2013),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실현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
- 국토교통부(2014.2), 2014년 국토교통부 투자방향 및 발주계획
- 국회 예산정책처(2009), 재정 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분야별 재원 배분을 중심으로)
- 국회 예산정책처(2011), 국제 비교를 통한 교통 SOC 투자적정성 분석
- 기획재정부, WEF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및 분석, 각 년도
- 기획재정부·관계부처합동(2013.5),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 김기원(2000.6), Welfare to Work 정책과 생산적 복지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동렬(2013.4),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과제,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 김영덕(2014), 서울시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권오현 외(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 지원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류재영 외(2012), 전환기의 SOC 투자정책방향: 도로정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민범식 외(2012), 건전한 도시생활기반 정비와 환경보전 방안, 국토연
구원

박용석(2012),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SOC 투자 정책 방향

박용석(2013),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외(2009), 2010년도 예산(안) 및 SOC 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송미령 외(2009),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이승우 외(2013), 중소 건설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유형 모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남건 외(2012),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
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조판기 외(2013),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 국
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2), 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 과제

현대경제연구원(2008),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

부록: 설문조사서

전문건설업체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조사

안녕하십니까?

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협회 회원사들의 시장창출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SOC 투자가 줄어드는 등 건설업계의 공공건설공사 수주 및 참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안의 일환으로 업계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인프라”를 뜻하며, 국민체감형 SOC, 복지형 SOC, 생활인프라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 교통, 복지, 여가, 안전시설 등의 국민생활에 밀접한 소규모시설이 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들의 시장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전문건설업체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어떤 개선방안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귀사와 귀하가 속한 업종에서는 어떤 사업이 확대되어야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쁜 환경에 처해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해 주신다면, 조사 결과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책건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등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사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출 및 문의>

- ♣ 설문지 제출 기간 : 2014년 8월
- ♣ 설문지 제출 방법 : 팩스, 이메일, 우편
- ♣ 문 의 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응답자 정보 >

※해당란에 체크(√) 및 기입 바랍니다.

귀사의 위치(지역)	① 수도권 ② 지방권 ③ 기타
귀사의 시공 영역	① 원도급공사 위주 ② 하도급공사 위주 ③ 원도급과 하도급 병행
귀사의 주력 업종	주력 업종 1가지를 꼭 적어주십시오. (업종: _____)

1. 귀사의 평균적인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① 100억원 이상
- ② 10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③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④ 10억원 미만

2. 귀사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3.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4.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는 다음 중 어떤 측면에서 가장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민 실생활의 편익 증대
- ②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복지 향상
- ③ 취약시설의 정비에 따른 안전 확보
- ④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발전
- ⑤ 기 타()

5.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밀착형 SOC 관련 시설의 전반적인 수준(시설 확보 및 시설의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 ②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 ③ 보통 수준이다.
- ④ 비교적 취약한 수준이다.
- ⑤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 ⑥ 기 타()

6.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는 현재 대비 어느 정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투자 수준 유지
- ② 현재 대비 20% 이상 투자 확대
- ③ 현재 대비 50% 이상 투자 확대
- ④ 현재 대비 100%(2배) 이상 투자 확대

7. 정부가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확대할 경우 다음 중 어떤 형태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중앙정부) 사업을 통한 확대
- ② 지자체(시·군·구) 사업을 통한 확대
- ③ 공공기관 사업을 통한 확대
- ④ 민간투자사업 촉진을 통한 확대

8. 다음 중 가장 우선시되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부문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거시설 부문
- ② 교통시설 부문
- ③ 복지시설 부문(교육·의료 포함)
- ④ 여가시설 부문(문화·체육 포함)
- ⑤ 안전시설 부문
- ⑥ 기 타()

9. 다음의 생활밀착형 SOC 주요 사업 중 가장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필요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 최대 5개 까지 복수응답 가능)

- ① 노후 주택 등 주거시설 정비 사업
- ② 노후 상하수도 개보수 사업
- ③ 노후 가스관 개보수 사업
- ④ 재래시장 개보수 사업
- ⑤ 주차장 확충·정비 사업
- ⑥ 도로(혼잡도로, 지방도로 등) 확충·정비 사업
- ⑦ 보도 및 보행이용시설 확충·정비 사업
- ⑧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개선 사업
- ⑨ 노후 철도·지하철시설 개선 사업
- ⑩ 버스 이용시설 개선 사업
- ⑪ 노후 학교 개보수 사업
- ⑫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
- ⑬ 보육시설 확충·정비 사업
- ⑭ 노인 의료 및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
- ⑮ 보건소 등 지역 의료시설 확충·정비 사업
- ⑯ 지역 문화시설 확충·정비 사업
- ⑰ 산책길·녹지·도시공원 조성 사업
- ⑱ 하천 주변공간 활용 사업
- ⑲ 캠핑장 등 레저활동 공간 조성 사업

- ⑳ 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 ㉑ 하천·제방·수로 정비 사업
 - ㉒ 홍수 예방시설 확충·정비 사업
 - ㉓ 노후 시설물 재난대비 개보수 사업
 - ㉔ 방범시설 확충·정비 사업
 - ㉕ 노후 산업·공업·농공단지 재생 사업
 - ㉖ 폐도·철도폐선 활용 사업
 - ㉗ 유휴 부지(국·공유지) 활용 사업
- ※ 기타 의견은 아래 10번 문항에 기입

**10. 상기 9번 문항의 사업 외에 귀사 또는 귀하가 속한 전문업종의 발전을 위해 확대
되기를 바라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문) 정부의 투자 확대를 바라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답)

**11. 전문건설업체들이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다음 중 어떤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대 3개 까지 복수
응답 가능)**

- ① 분리발주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수주를 늘려야 한다.
- ③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해야 한다.
- ④ 제안 또는 공모 방식을 통해 전문공사 특성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 ⑤ 지역 업체의 참여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
- ⑥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조치를 통해 민간투자형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활발해지도록 해야 한다.
- ⑦ 실적공사비 제도 배제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
- ⑧ 기 타()

12. 기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2014년 10월 인쇄

2014년 10월 발행

발행인 노재화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13층)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4